자유한국당 분야별 정책비전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8정책비전 + 1베네수엘라REPORT

외교안보, 교육, 청년, 여성사회, 환경, 안전, 문화예술체육, 주거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8정책비전 + 1베네수엘라REPORT

외교안보, 교육, 청년, 여성사회, 환경, 안전, 문화예술체육, 주거

2019. 12.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인사말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발간사 **정용기** 정책위의장

* 경제분야 정책비전은 「민부론」으로 발간되었음 (2019.9.22 발표)

자유한국당 정책비전

외교안보 정책비전

I 개요 17
1 비전 및 목표 17
2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18

II 외교 분야 19
1 한미동맹 19
2 한중관계 21
3 한일관계 22
4 경제외교 24

III 안보 분야 26
1 북한 핵·미사일 26
2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후 신(新) 합의문 채택 28
3 전작권 전환 30
4 군사력 32

IV 통일 분야 33
1 대북-통일관계 33
2 북한 인권 35

자유한국당
정책비전

교육 정책비전

I 개요 39
- 1 비전 및 목표 39
- 2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40

II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41
- 1 기초학력 41
- 2 학교 선택권 43
- 3 고교 직업교육 46
- 4 전문대학 특성화 48

III 공정한 교육 50
- 1 대학입학제도 50
- 2 사교육비 52
- 3 평생교육 53

IV 교육행정체계 개혁 54
- 1 교육감 선거 54

청년 정책비전

I 개요 59
- 1 비전 및 목표 59
- 2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59

II 이슈별 정책비전 60
- 1 공정 60
- 2 1인 가구 등 64
- 3 청년수당 등 청년정책 66

자유한국당
정책비전

여성사회 정책비전

I 개요 71
1 비전 및 목표 71
2 분야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72

II 여성분야 73
1 여성안전 73
2 양성평등 76

III 기타 사회 분야 78
1 아동학대 78
2 저출산문제 80
3 젠더갈등 84
4 노인 86
5 장애인 88

환경 정책비전

I 개요 93
1 비전 및 목표 93
2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93

II 이슈별 정책비전 94
1 미세먼지 94
2 수질, 수자원 관리 96
3 국토관리 98

자유한국당
정책비전

안전 정책비전

Ⅰ 개요 105

1 비전 및 목표 105

2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106

Ⅱ 이슈별 정책비전 107

1 재난안전관리 제도 개선 107

2 국가기반시설 관리 109

3 시민생활안전 강화 111

4 안전교육훈련 강화 113

5 재난안전관리자 115

문화예술체육 정책비전

Ⅰ 개요 119

1 비전 및 목표 119

2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120

Ⅱ 생활문화·생활체육 분야 121

1 격차 해소 121

2 생애주기별 시스템 구축 123

3 생활문화·체육 지도자 육성 124

Ⅲ 문화산업·스포츠산업 분야 126

1 한류(산업경쟁력) 126

2 문화체육 전문가 127

3 일자리 128

Ⅳ 제도개선(시스템) 분야 130

1 민간중심 130

2 낙하산 인사 131

자유한국당 정책비전

주거 정책비전

Ⅰ 개요 135

1 비전 및 목표 135

2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136

Ⅱ 이슈별 정책비전 137

1 분양가 상한제 관련 137

2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관련 139

3 신도시 정책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관련 140

4 장기소유주택 재산세 및 어르신 주택 재산세 부담 경감 141

5 보유세 관련 142

6 생애최초 주택구입 관련 143

7 재개발·재건축 관련 144

베네수엘라 REPORT위원회 활동보고

경제가 망해도 정권이 유지되는 사례 연구 145

Ⅰ 연구배경 147

Ⅱ 차베스 정권의 정치적 전략 149

Ⅲ 사법부 장악 151

Ⅳ 입법부 장악 및 선거제도 악용 153

Ⅴ 재원 대책 없는 과도한 복지로 인한 경제파탄 156

Ⅵ 반시장 정책으로 시장 신뢰 상실과 국가 경제 파탄 158

Ⅶ 지방권력 장악 및 조직화 160

Ⅷ 언론장악 162

Ⅸ 대중 선동을 통한 국민의식 장악 164

Ⅹ 문재인 정권 상황과 시사점 166

인사말
황교안 당대표

우리가 피와 땀, 눈물겨운 노력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과거의 솔루션으로도 해답을 찾기 어렵고, 새로운 변화에 지나치게 함몰되어서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겪는 경제 위기는 남 탓을 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오늘의 성취가 가능하도록 뒷받침했던 튼튼했던 안보마저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지금의 위기를 국제적인 상황 등 외부 탓으로 돌리려고 하지만, 그렇게만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호의적이진 않지만, 그것을 더 악화시켜 심각한 위기로 내몬 것은 이 정부의 명백한 오판과 잘못된 정책입니다. 망국적 정책이 망국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은 생산, 투자, 소비가 모두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성장의 엔진은 다시 점화하기 힘들 정도로 싸늘히 식고 있습니다. 그냥 버티다 보면 좋아지겠지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힘든 안보와 외교는 두 말 할 나위 없습니다. 핵보유국을 꿈꾸며 온갖 도발을 서슴지 않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 치의 여유를 부릴 틈이 없습니다. 항상 경계하고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안보를 지키는 방법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스스로 그 길을 걷어 차버리는 치명적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혈맹을 강조하고 동맹을 중시해야 함에도, 이 정부는 스스로 동맹과 우방을 가볍게 여기는 우(愚)를 범했습니다.

단언컨대,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정부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선택들을 마치 남의 일인 양 저질러 버렸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정파적 이해로 2년 반의 국정을 일관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장외투쟁을 하고, 머리도 깎고, 단식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은 야당은 저들의 폭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앞장서 해결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신뢰를 쌓는 것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정책은 국민 여러분과 당이 소통하는 핵심적인 기제이고 통로입니다. 그래서 장외투쟁, 원내투쟁도 치열하게 펼쳐가면서도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드는 정책투쟁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이 정부의 어설프고 무모한 정책실험을 단숨에 뒤엎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모든 당직자와 당원들이 머리를 싸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민부론', 가짜 평화에 비굴하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민평론', 무너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 그리고 도전과 창의의 청년정신을 키우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 정책 비전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정책비전의 중심은 한 마디로 말하면 '국민 중심'의 철학입니다. 거기에는 과거 성장시대 국가중심의 성장일변도 정책에 대한 반성(反省)이 담겨있고, 다른 한편으론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별되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한 천착(穿鑿)과 응전(應戰)의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고 할 수 있지만, 확연히 다릅니다. 국가가 아닌 국민을 중심에 두면, 과

거의 솔루션은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의 정책비전에는 과거와는 다른 국민중심의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대한 우파정당의 혁신적 응전입니다.

이번 정책비전 자료집에는 이미 발간한 '민부론'에 이어 그동안 차례로 발표한 외교안보, 교육, 청년 정책비전에 더해서 여성사회, 환경, 안전, 문화예술체육, 주거 등 민생 전반의 정책비전을 추가해 담았습니다. 경제와 나라를 망쳤지만 퍼주기 세금복지로 정권은 연명하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분석해 경계(警戒)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정책의 저변에는 '국민 중심'의 정신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의 성취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자유'의 바탕 위에서 '공정'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 모두가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하나가 돼서' 이룩한 성과입니다. 눈앞의 절박한 목표인 성장을 위해 거침없이 달리는 과정에서 '공정'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밀린 적은 있었지만, 한 번도 그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미래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자유'의 가치는 실종되고, '공정'에 대한 믿음과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해묵은 이념과 진영논리에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한강의 기적'도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힘도 '자유'와 '공정', '하나되는 대한민국'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유'없는 '과도한 개입과 획일적 평등', '공정'없는 '편법과 반칙', '통합'이 아닌 '분열과 갈등'으로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해답을 담은 비전과 정책을 국민 여러분께 제시하고 당당하게 평가받는 것이 정당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여투쟁에 버거운 상황에서도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로 정책을 정성들여 만들고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번에 발표하게 된 정책비전 자료집입니다. 여기에 담긴 정책들은 자유한국당이 국민 여러분과 맺는 공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구체화해서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저는 단식을 마치면서 제 심경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마음은 제가 노천 단식투쟁을 통해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새삼 깨달은 결론입

니다. 이번 정책비전 자료집도 그 연장선에 있고, 앞으로 해나갈 당의 혁신과 쇄신, 자유우파 대통합,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 투쟁도 모두 거기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자유한국당의 충심을 헤아려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오늘 정책비전 자료집을 발간하기까지, 정용기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정책위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가 컸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찾아가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만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없이 진행한 현장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고견을 제시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비전 자료집이 우리 사회의 꺼져가는 희망을 되살리는 새로운 불씨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나경원
원내대표

대한민국은 건국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 속에서 국민이 중심이 되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며 번영을 피워낸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길을 걸어오면서 경제강국, 안보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2년반 헌법과 법치 자리에 이념과 친문이 대신했고 국가개입주도의 사회주의경제 정책 실험이 경제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견고했던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수출, 고용, 생산, 투자,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는 물론이고 경제의 앞날을 비추는 잠재성장률과 재정건전성, 양극화, 미래 먹거리 부재, 4차 산업시대 경쟁력 약화 등 미래 전망은 더욱 어둡기만 합니다.

안보는 '안'보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한의 위협은 커져가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4강 외교는 길을 잃고 고립과 갈등 속을 헤매면서 안보 위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독재로 표현 될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전체주의식 권력남용이 일반화 되면서 교육, 언론, 문화예술, 사회 등 전 분야에 법과 원칙대신 이념과 정치적 편향성이 사회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사태를 비롯해 친문 측근세력의 부정과 비리는 대한민국이 쌓아온 공정과 정의라는 탑을 깡그리 무너뜨렸고 극에 달한 국민의 분노는 광화문에서 10월 항쟁의 모습으로 발현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 그리고 악정에 맞서 온몸을 던져 투쟁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정책방향을 설정 개발함으로써 강한 제1야당 국민을 위한 대안정당으로 비전을 제시하고자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정책비전 수립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해왔습니다.

위원장 산하 외교안보·교육·청년·여성사회·환경·안전·문화예술체육·주거 등 8개 분과를 구성하고 운영해왔습니다. 당의 많은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숙의하여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정책비전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라 각종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고 시장이 생동감있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저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文 정권의 악정을 극복하고 무너진 경제, 안보, 민생, 민주주의를 다시 재건해 힘찬 질주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정책비전 자료집 발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해주신 정용기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해 각 분과별 위원, 당 정책국과 수석·전문위원 등 '자유한국당 정책비전 수립 위원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발간사
정용기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정부정책이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경제정책 실패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복지, 산업, 환경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신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당은 이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야겠다고 생각해 '정책 비전'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정책이 곧 국민의 삶'이라는 생각과 당의 정체성을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주요 정책 현안을 8가지로 분류해, 외교안보, 교육, 청년, 여성사회, 환경, 안전, 문화예술체육, 주거 분과로 나누고, '분과별 정책비전위원회'를 구성해 우리 당의 정책방향과 메시지, 정책과제를 꼼꼼히 설정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정책비전을 정리하면서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집권 후 벌였던 숱한 사건과 놀라우리만치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 하에 8개 분과와 별도로 '베네수엘라리포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물이 바로 이 자료집입니다. 그리하여 이 자료집 이름을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 붙였습니다.

다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당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발표한 '민부론(民富論)'이 있기에, 이번 자료집에 싣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시한 자유한국당의 ‘정책비전’은 앞으로 총선 공약과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원회가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당의 ‘정책비전’에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안보 정책비전

민평론(民平論)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

I 개요
1 비전 및 목표
2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II 외교 분야
1 한미동맹
2 한중관계
3 한일관계
4 경제외교

III 안보 분야
1 북한 핵·미사일
2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후 신(新) 합의문 채택
3 전작권 전환
4 군사력

IV 통일 분야
1 대북-통일관계
2 북한 인권

I 개요

1 | 비전 및 목표

민평론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

외교

1 한미동맹

한미간 신뢰회복,
한반도와 국제평화의
축이 되는 한미동맹

2 한중관계

당당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3 한일관계

역사문제와 미래·경제문제
투트랙 전략 실천을 통한
한일관계회복

4 경제외교

적극적 경제외교로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

안보

1 북한 핵 미사일

북핵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2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후 신(新) 합의문 채택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군사합의

3 전작권 전환

북핵폐기·자주국방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에 기반한
우리 주도 국방태세 구축

4 군사력

힘을 갖춘 튼튼한 국방
- 정예강군, 첨단전력, 민군상생

통일

1 대북-통일관계

자유·평화 한반도

2 북한인권

북한 주민 자유와 행복을
위한 인권향상

2 |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자유한국당
외교 분야		
이중플레이로 무너뜨린 신뢰, 악화된 한미동맹	한미동맹	한미간 신뢰회복, 한반도와 국제평화의 축이 되는 한미동맹
타성적인 친중 외교정책	한중관계	당당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국내정치 오남용으로 돌아온 한일관계 파탄	한일관계	역사문제와 미래·경제문제 투트랙 전략을 통한 한일 관계 회복
실종된 경제통상	경제외교	적극적 경제외교로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
안보 분야		
핵은 모르쇠, 퍼주기 경협에 올인	북한 핵·미사일	북핵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일방적 남북군사합의에 우리만 무장해제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후 신 합의문 채택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군사합의
안전보장없는 무리한 임기내 전작권 전환 추진	전작권 전환	▸ 북핵폐기·자주국방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 한미동맹에 기반한 우리 주도 국방태세 구축
알맹이 없는 포퓰리즘 국방개혁으로 국방력 약화	군사력	힘을 갖춘 튼튼한 국방력 ▸ 정예강군 ▸ 첨단전력 ▸ 민군상생
통일분야		
자유 실종 한반도	대북-통일관계	자유·평화 한반도
김정은 독재 외면, 잊혀진 북한인권	북한인권	북한주민 자유와 행복을 위한 인권향상

II 외교 분야

1 | 한미동맹

배경

- 북한 일변도 정책으로 한미동맹 약화
-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연합군사훈련 축소 및 명칭 변경, 한일 갈등에 중재 간청 등으로 한미관계의 신뢰가 사라지고 경고등이 켜진 상태
  -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에 대한 대응 부족
    - 방위비 분담금 협상 1년 단기 계약
    -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및 명칭 변경 주도
  - 북핵 위협은 그대로인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조기 추진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
  -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지 회피

비전 및 메시지

비전 **한미간 신뢰회복, 한반도와 국제평화의 축이 되는 한미동맹**

메시지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날로 증강되는데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미간 신뢰회복이 시급합니다.
- 글로벌 차원에서 한·미 상호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국제평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복원
  - 북한 문제 및 동맹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
- 한미동맹 위기 요인을 안정적으로 해결
  -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다년 협정 복원 추진
  - 전작권 전환은 북핵 위협 해소 등 조건에 기반하여 추진
  - 미국의 통상압력 원인 완화
- 한미간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강화
  -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 강화
  - 신형 미사일에 대한 미사일 방어 강화
  - 실효적 북핵 억제를 위해 핵공유 협정 체결 (추진)

참고

① 전술핵 무기

- 전략핵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폭격기발사 순항미사일(ALCM)을 제외한 위력이 약한 핵무기

② 핵 공유 협정(Nuclear Sharing Agreement)

- 핵 보유국의 핵을 동맹에 참여한 국가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핵우산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 한미일 안보협력 제고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공고화
-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

2 | 한중관계

배경

-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반미친중으로 비춰지는 행보중
  - 북핵 위협은 그대로인데 북핵 폐기에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 내지 못함
  - 경제보복, 미세먼지·환경 등에는 굴욕적 저자세
  - 한중 실질협력 확대는 제한
- 중국과 러시아의 빈번한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에도 불구하고 중국측에 분명한 해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

비전 및 메시지

비전 당당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메시지
- 북핵 폐기가 한국, 중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 한중간 진정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위해서는 미세먼지·환경 등에서 양국간 공동 노력이 절실함을 인식시키겠습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 북핵 폐기를 위한 한중간 공동노력 합의 도출
- 미세먼지 문제 해결 위한 공동기구 설치 추진
-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에 대해 단호한 대응
- 한중 안정적 경제 협력

3 | 한일관계

배경

-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과는 강제징용 대법 판결 및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문제로 대치중
  -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미쓰비시 등 해당기업에 협의 절차를 제안하였으나 해당기업의 무반응으로 국내 상표권·특허권 등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 반발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여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음
- 역사문제가 경제, 외교, 국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일본에 대한 외교적 노력 없이 국내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국내 정치에 이용

비전 및 메시지

비전

역사문제와 미래·경제문제 투트랙 전략 실천을 통한 한일관계 회복

메시지

국내정치적 접근으로 한일관계 파탄을 초래하고 그 결과, 우리 안보·경제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역사문제에는 단호하게, 미래·경제문제에는 협력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한 실용적 한일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 한미일 안보협력 제고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공고화
- 강제 징용 피해자 및 위안부 피해자 외교적 해결을 위한 모멘텀 조성
- '(가칭) 한일미래세대위원회' 구성 추진 * 청년 중심으로 한 정부 산하기구

참고 현재 운영중인 한일간 민간기구

① 한일협력위원회

- 1969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민간기구로 한·일 양국의 국회의원, 재계 및 문화계 인사 등이 참여

② 한일미래포럼

- 2005년 『한일사회문화포럼』으로 외교통상부에 등록, 한·일간 이슈를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 정책 담당자, 연구자, 언론인, 일반시민과 대학 등이 참여하는 열린 포럼 개최함. 2007년 5월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사단법인 『한일미래포럼』으로 법인명 개칭

4 | 경제외교

배경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제적 위상과 경제성장이 약화

- 11월 말 개최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제외하고는 국제회의 주최 및 주도 실패
- 일부 대기업의 실적을 제외하면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 한미, 한중, 한일관계에서 모두 압박요인 발생
  - 새로운 시장 개척은 미진
- 오로지 북한 문제 중심의 사고로 국제화 시대에 역주행
  - 평화경제를 주장하지만, 북핵문제로 시작도 못하는 실정
  - 정부의 관심이 북한에 쏠려 해외 시장 개척에 무관심

비전 및 메시지

비전 **적극적 경제외교로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

메시지 문재인 정부의 북한중심적 외교로 국격이 저하되고, 경제외교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를 다시 일으켜 세워 세계 속의 한국을 각인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지역별 특성화 된 경제협력 추진

-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신시장 확보
- 북미, 유럽, 러시아 등과의 기술 협력 강화
-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과의 컨소시엄 강화

- 외교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확보 지원

글로벌 코리아 어게인 (Global Korea Again)

- 통상외교 전문 역량 구축
- 민관 협력체계 강화
- 주요 국제회의 (G20, APEC, ASEM, EAS)에서 한국 위상 제고
- 한국과 지역기구(EU,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동남아) 간 양자 협력 강화

세계 경제 및 환경 협력 강화

- RCEP 및 CPTPP 등 아시아 태평양권 다자경제협력 참여
- 녹색성장 부흥을 통해 환경 경제의 주도력 확보

III 안보 분야

1 | 북한 핵·미사일

배경

|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를 자처하며, 마치 커다란 역할이라도 할 것인 양 내세웠지만, 북핵 폐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 없이 대화를 위한 대화만을 추진하고 있음. 그 결과 북핵 협상에 진전은 없고 북한 핵능력만 강화시켜 주었음

- 북핵 폐기 개념 미확인
- 북핵 폐기 로드맵 부재
- 북핵 폐기 대화에서 소외
- 북한 핵능력 고도화

비전 및 메시지

비전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메시지

북핵 폐기없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는 '가짜평화 쇼'입니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함으로써 북핵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북핵 폐기 의지와 선조치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정부는 오로지 남북협력사업 재개와 확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시하고 오로지 북한 김정은 바라기 방향의 정책으로는 북핵 폐기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반드시 북핵 폐기를 달성하여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 군사분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의 원상회복
  - 핵 공유 등 확장 억제 강화 등
- 한미간 핵공유를 위한 협정체결 및 군사협력 강화
- 한미간 북핵폐기 공조 강화를 통해 다음 조건이 전제된 미북대화를 추진하도록 설득
  - 북핵 폐기 개념 우선 확인('조선반도 비핵화' 개념 거부)
  - 북핵 폐기 로드맵 확인(완전한 핵 폐기 단계까지 포함)
- 북한이 북핵 폐기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
  -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이 북핵 폐기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
- 대화와 별개로 국제 사회의 대북압박을 통한 철저한 제재 이행으로 북한이 대화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여건 조성
- 단, 북한이 올해 말까지 대화에 임하지 않는다면 연합군사훈련부터 훈련의 내용 및 규모를 복원
  - 튼튼한 억제력 과시를 통해 북한의 핵능력을 상쇄
- 3축체계 조기 구축
  -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구축
  - 북한 SLBM에 대비한 수중 킬 체인(Kill Chain) - 수중 탐지 조기 경보체계 구축

2 |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후 신(新) 합의문 채택

배경

- 2018.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됨
-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군사력 붕괴와 국가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
  -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증강, 봉쇄·차단, 정찰행위 중단하기로 한 군사 분야 합의서 제1조 1항과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에 적대행위 금지 구역을 설정한 2항과 3항이 실행되면 우리 군은 향후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는 물론 우리 군 독자의 대규모 훈련도 어려워지게 돼 심각한 안보 취약성에 노출됨
  - 특히, 무력증강 금지는 사드배치, F-35 도입 등에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전반적인 방위력 증강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함
  - 군사분계선 5㎞내 포병사격훈련 금지는 유사시 우리 군의 제1차 차단력을 불능화시킬 수 있고 해상기동훈련 중지는 해군력의 불능화와 NLL 무력화를 초래
  - 비행금지구역은 수도권 방어를 위한 우리 군의 정찰역량을 크게 제약
  - 평화수역 설정은 사실상 NLL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며 북한이 마음을 달리 먹으면 서해를 침투 통로로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분쟁 해역화 할 가능성이 증대

비전 및 메시지

비전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군사합의

메시지

오로지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고 있는 일방적인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만 무장해제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실질적 평화 구축수단으로서의 남북군사합의를 추구하겠습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 일방적인 9.19 남북군사합의의 문제점 집중 홍보
- 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 후 신 합의문 채택
- 실질적 평화 구축 수단으로써의 새로운 남북군사합의 추구

3 | 전작권 전환

배경

북한 핵·미사일이 여전히 위협적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 전환에 집착해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

-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 장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창설안(한국군 사령관 체제에 전격 합의) 승인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속도
- 국방부장관(2018.12.5),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지시
-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보고 된 '국방개혁 2.0'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포함하고 있으며 반면 한국형 3축 체계, 참수부대, 공세적 신작전개념 등 적극적 대북 억제를 위해 구축해왔거나 구상해온 것들은 빠짐
- 북한 탄도미사일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발사 시험이 청와대 지시로 수차례 연기 → KAMD의 핵심무기인 L-SAM 시험발사 연기로 3축 체계 구축에 차질

비전 및 메시지

비전

- **북핵폐기·자주국방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 **한미동맹에 기반한 우리 주도 국방태세 구축**

메시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임기내 전환에 집착한 전작권 전환 추진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한미간 합의된 3가지 조건(▲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에 기초하여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조기에 북한 핵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3축 체계 완비

-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구축

전작권 전환조건 구체화 및 평가체계 강화

우리 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 특히, 미국측에 의지하고 있는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경주
- 문재인 정부의 3不 정책 반대 견지

한미동맹 강화 병행, 주변국과 안보협력 강화로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

- 이번 독도 영공침범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외교 복원

4 | 군사력

배경

- 군의 전문 영역을 존중하지 않고 정치논리에 따라 국군을 통제하고 있음
  - 정치논리에 근거한 장관·합참의장 발탁
  - 군 장성 모욕과 진급 개입
- 문재인 정부는 장병 복지와 처우 개선 등을 위해 2019년부터 5년 동안 33조 9,000억원, 병사봉급 인상에만 10조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함. 국방정책도 지지층 확산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며, 병사들의 군 복무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비전 및 메시지

비전

힘을 갖춘 튼튼한 국방

▲ 정예강군 ▲ 첨단전력 ▲ 민군상생

메시지

정치적 목적에 군을 이용하기 위한 '포퓰리즘 국방개혁'에 맞서 오로지 튼튼한 안보를 위해 정예강군, 첨단전력 증강, 민군상생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한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 새롭게 작성될 국방백서에 적 개념 분명히 하고, 군인들에게 관련 교육 강화
- 첨단장비와 재래식 장비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high low mix를 통해 국방개혁 효율성 제고
- 야전과 현장 중심으로 필요한 영역부터 개혁
- 미국과 협력해 한국형 전략 무기 개발

Ⅳ 통일 분야

1 | 대북-통일관계

배경

-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북한에 굴욕적인 남북관계 관행 지속
  - 북한에게 끌려다니는 대북정책
    - 개성 연락사무소 운용, 남북대화 등을 북한이 주도
    - 정례화는 없고 북한이 원하면 언제나 진행되는 왜곡된 대화
  - 북한의 모욕적 비난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굴종적 태도
    - 비굴한 추태, 소대가리, 냉면 목구멍 등이 난무함에도 무대응으로 일관
    - 국격의 훼손에도 태연
  - 북한의 의사 타진 없이 희망에 기초한 남북경협 제안
    - 신한반도경제지도와 같이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경협 추진
    - 북한에게 거절당한 쌀 지원 등
- 이산가족, 납북자,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인 지속적 관심과 지원 부족

비전 및 메시지

비전 **자유·평화 한반도**

메시지 자유없는 통일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유·평화 한반도를 이뤄내겠습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남북관계 정상화

- 원칙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의 정착
- 남북대화의 상호주의 적용, 북측에 끌려 다니지 않는 협상
- 상호 존중 관행화, 북한의 모욕적인 발언 시 국격 지키기 위해 확실한 대응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구축

-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
- 안정적 경협 추진을 위한 북한의 법적 보장 병행
- 대북제재의 틀을 유지하며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

남북관계의 호혜적 발전

- 비핵화에 기반한 남북 경협의 단계적 확대
- 북한 주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의 경협 우선 추진

자유민주적 통일 여건 조성

- 평화공존을 우선하되,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며 자유민주적 통일을 추진
- 성급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추진은 반대
- 자유민주적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주변국 협력 강화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문제 우선 해결

탈북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2 | 북한 인권

배경

-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부재
  - 오로지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에 중점
-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북한 당국자만 좋은 정책
    - 북한 주민 생활과 무관한 김정은 정권과의 교류에 중점
    -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에 중점
  - 북한 주민을 살피는 정책이 전무
    - 인도적 지원이 원칙이나 수요조사, 배분 등의 논의 전무
    - 일방적 인도적 지원을 시도했으나, 거부 당함

비전 및 메시지

비전

북한 주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인권 향상

메시지

문재인 정부는 독재자만 바라보며 북한인권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정은 독재·핵·미사일에 단호히 대처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북한 인권 개선을 꾸준히 추진

- 북한인권법 이행 촉구(2016.3.2. 본회의 통과)
- 북한인권재단 조속 가동 촉구
-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
-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사장된) 북한 인권 사무소 운용 활성화
- 북한 인권 개선 시 대북 지원 확대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대북 인도적 지원 체계화

- 북한 인도적 지원 수요를 정밀히 조사
- 북한 주민들에게 배분이 이루어지는가를 철저히 모니터링
- 쌀보다는 산모 유아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영양식 제공, 현금화 가능성 차단
- 단순한 의약품 제공을 넘어 질병 예방 등 보건 프로그램 제공

북한 비핵화 진전 시, 대북제재 완화와 함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우선 추진

-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임금 비율 제고
- 북한 농림, 축산, 삼림 사업 지원을 통한 주민 생활 개선
- 도로 등 사회간접자원 지원 및 학교 개축 등 실질적 혜택 제고

교육 정책비전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

I 개요	1 비전 및 목표
	2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II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1 기초학력
	2 학교선택권
	3 고교 직업교육
	4 전문대학 특성화
III 공정한 교육	1 대학입학제도
	2 사교육비
	3 평생교육
IV 교육행정체계 개혁	1 교육감 선거

I 개요

1 | 비전 및 목표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1 기초학력
기초학력 보장체계 강화

2 학교 선택권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강화

3 고교 직업교육
고졸 희망시대 실현

4 전문대학 특성화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

공정한 교육

1 대학입학 제도
대학입학제도 정시확대 및 수시전형·단순화 공정성 제고

2 사교육비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비 경감

3 평생교육
국민행복 및 재기의 기반 평생교육

교육행정 체계개혁

1 교육감 선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2 |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자유한국당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학업성취도평가 무력화	기초학력	기초학력 보장체계 강화
선택권 박탈 하향평준화	학교 선택권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강화
정책 실행의지 부족	고교 직업교육	고졸 희망시대 실현
전문대학 특성화 실종	전문대학 특성화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
공정한 교육		
특혜, 비리로 얼룩진 부정입시	대학입학 제도	대학입학제도 정시 확대 및 수시 전형 단순화·공정성 제고
1인당 사교육비 최대치	사교육비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비 경감
직업교육 기회 및 인프라 부족	평생교육	국민행복 및 재기의 기반 평생교육
교육행정체계 개혁		
깜깜이 교육감 직선제	교육감 선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Ⅱ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1 | 기초학력

비전 기초학력 보장체계 강화

배경

- 학업성취도평가는 1986년 도입되어 우파 정부 때 전수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전교조와 진보교육감들이 '서열부추기는 줄세우기 시험'이라며 반대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일부 학교만 시험을 치르는 '표집 방식'으로 전환됨
  - 국가수준과 국제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가속화되고 있음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3과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6.6%로 국어를 뺀 모든 과목이 전년보다 증가
  - 중3 : (국어) 4.4%, (수학) 11.1%, (영어) 5.3%
  - 고2 : (국어) 3.4%, (수학) 10.4%, (영어) 6.2%
  - 특히 수학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중·고교생이 10% 이상으로, 중학생은 2009년 이후 처음, 고교생은 2006년 이후 처음임
-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성적 역시 최상위권을 유지했으나 2015년에는 역대 최저 성적을 기록하며 동아시아에서 최하위권

  *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OECD가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
- 올해 3월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1~고1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진보좌파 교육감이 다수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반발에 부딪혀 아직도 협의중인 상태
- 진보성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서울의 초·중·고교생 기초학력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지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년부터 초3과 중1 대상으로 기초

학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 발표(9.5)

※ 교육부가 2016년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중3과 고2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6%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음

- 전교조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진단고사=일제고사'라며 반발하지만,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진단검사 도입에 긍정적인 분위기임

정책 방향 및 과제

국가수준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체제 강화를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전희경의원, 19.3.29.) 중점 추진

-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 및 결과 공개 의무화

평가의 책무성 강화

- 기관평가(학교자체평가) → 학교에 대한 평가 추진
-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추진

2 | 학교 선택권

비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

배경

특목고 및 자사고

-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에서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제외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를 2025년부터 일괄 폐지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년 초까지 개정하겠다고 발표(19.11.7)
- 특목고 및 자사고 일괄폐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면전환용 정책으로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교육 폭거 처사
  - 교육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헌법 정신 훼손 ▲교육 다양성 포기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선진국 방향에 역주행 ▲강남 8학군 및 목동 등 특정지역 교육특구로 부활, 부동산 폭등 ▲사교육 영향력 강화 ▲일반고 내 또 다른 고교서열화 발생 ▲우수 학생의 해외유학 수요 증대 ▲현실적 대안 없는 교육 평둔화(平鈍化·수준이 낮게 평균화하는 것)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
- 헌법 제31조 제6항에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육법정주의가 명시돼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과 진영 논리로 교육정책에 접근해 시행령으로 고교 체제를 뒤흔들며 교육 현장에 대혼란 초래

* 헌법 제31조 제6항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혁신학교

- 혁신학교는 2009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주도로 등장해 진보좌파 교육감의 대거 당선과 더불어 10년간 130배 폭증('9 : 13개 → '19 : 1,714개)해, 전국 초중고교의 약 15%를 차지함

※ 혁신학교는 진보좌파 교육감 공약 이행을 위한 정치 이념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 유형이 아님을 주의

-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혁신학교의 고교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 평균(4.5%)보다 2배 이상 높은 11.9% 기록
  - 혁신학교는 일반학교보다 연간 5천만 원 이상 지원받으면서도 학력이 일반 학교에 비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낮고, 진학 기피현상까지 나타남

※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이 송파구 헬리오시티 내 신설 예정 초·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려다 학부모 반대로 취소

- 혁신학교 공모절차와 형식적인 재지정 평가에 대해 논란 야기
  - 혁신학교는 '교원 또는 학부모의 50% 이상 동의'를 거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신청이 가능하여, 학부모 의견에 상관없이 교사들의 동의만으로 안건 상정 자체가 가능함

※ 서울 대곡초·개일초(강남)·양진초(광진) 등은 지난 5월, 학교측이 교원 동의만 얻어 혁신학교 공모 신청을 추진했지만,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

  -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음에도 정량평가 없이 형식적으로 재지정 평가를 하는 탓에 혁신학교 탈락율은 1.2%에 불과

정책 방향 및 과제

특목고 및 자사고

- 현 정권이 추진하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은 절대 불가
- 고등학교 유형, 신입생 선발방법, 지정취소요건을 규정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중점 추진
  -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종배의원, 2018.1.12.) : 시행령에 규정된 고등학교의 유형,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초·중등교육법개정안(김한표의원, 2019.5.23.) : 자사고로 지정되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을 경우 교육감이 평가를 통한 임의적인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
- 하향 평준화된 일반고의 정체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맞춤형 고교체제로 전환

혁신학교

- 혁신학교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인 조치
- 혁신학교의 성과평가(기초학력 미달률 포함 등) 실시 및 평가결과 정보 공시
- 교육주체(교원, 학생<중학교 이상>, 학부모)에게 '혁신학교' 지정 권한 부여 강화
  - 현행 '교원 또는 학부모' 동의율 50% → 교원, 학생(중학생 이상), 학부모 동의율 상향 조정
  - 재지정 평가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결정권 부여 검토
- 편향된 정치 이념을 교육에 주입하는 등 교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 신설 추진

3 | 고교 직업교육

비전 고졸 희망시대 실현

배경

- 문재인 정부의 고졸 취업자 정책은 우파 정부 정책의 그림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실행 의지 의문
- 특히, 지난 '17년 말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고 발생 이후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간 학생의 안전과 권익보장이 강화되었다고 발표(19.1.31)했으나 참여한 학생과 기업의 수가 급감했음

  * 실습참여 학생 수 : ('16) 60,016명 (58.5%) → ('17) 43,026명 (45.1%) → ('19.1) 22,479명 (22.9%)

  * 참여 기업 : ('16) 31,060개 → ('17) 19,709개 → ('19.1) 12,266개

-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현장실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안전과 권익 확보에 실패함.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 현장실사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급감하여 취업을 위한 현장실습 유명무실화
- 또한, 2022년의 정책 목표치는 지난 2016년 현장실습 참여 학생 및 기업 수와 유사하여 정부의 정책 실행 의지 부족

정책 방향 및 과제

- 2015년 개정 NCS기반* 교육과정 실행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현장 직무능력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질 관리 강화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국가직무능력표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교 직업교육 지원 및 고졸 채용 확대

-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확대를 통한 학교 직업교육과 자격검정의 연계성 강화
- 시·도교육청 내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실습 전문가를 배치하여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추진하고 모니터링하여 교육 관리 체제 확립
- 틈새노동시장의 특수인재 양성 ‘Apprenticeship 프로그램(견습생 프로그램, 도제교육)’ 도입

4 | 전문대학 특성화

비전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

배경

- 현행 전문대학은 1979년 이래로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1995년의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규모가 급증했고, 수업연한이 2년에서 대체로 3년으로 늘어났으며, 간호학과는 4년 과정이 보편화됨. 2008년부터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 도입되었고 1년 혹은 2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문대학이 대체로 '종합대학교'를 지향하여 성장하면서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편성 등이 일반대학처럼 점차 학문중심으로 접근되었고,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유연하게 부응하지 못하여 졸업생의 취업률도 저조한 실정
- 우파 정부에서는 특성화 전문대학의 저변 확대,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SCK)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취업률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음

  * 전문대 취업률 ('15) 69.5%, ('16) 70.6%, ('17) 69.8%

  *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취업률 격차 ('13) 3.1%, ('16) 6.3%, ('17) 7.2%

- 문재인 정부 들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SOK)'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나 이전 사업과 '19년 이후 사업의 연계성 계획이 미흡함. 국정과제 이름만 유지할 뿐 실제적인 특성화 추진력은 상실됨

정책 방향 및 과제

- 대학 자율적으로 선택한 산업중심 특성화 추진
- 일반대학교와는 차별적으로 NCS를 활용한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에 주력
- 전문대학의 학위과정에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을 도입하여 직업교육과 자격검정이 상호 연계되도록 확대
- 학령인구는 감소하나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의 직업능력향상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단기 직무능력 향상 및 자격취득 비학위 과정을 확대
- 전문대학의 비학위 과정 활성화를 위하여 학점은행제와 선행학습인정제 등과 연계 방안 마련

Ⅲ 공정한교육

1 | 대학입학제도

비전 대학입시제도 정시 확대 및 수시 전형 단순화·공정성 제고

배경

- 조국 자녀 입시 의혹에서 보듯이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하여 경력을 위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 발생
- 국민들은 학생 자신의 능력, 노력, 성취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 부모와 사교육 등에 의해 학생의 대학 합격이 좌우되는 불공정 사례 증가에 분노하며,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거세게 요구
-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63%가 "대입제도, 수시보다 정시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

※ 여론조사 결과(9.5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
- 응답자 중 63.2%가 '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시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답변
- '정시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모든 직업과 연령, 지역,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대다수였는데 특히, 학생과 20대에선 각각 73.5%, 72.5%로 70%를 넘는 최고치 경신

- 이에, 자유한국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마련을 위해 여론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간담회 및 전문가간담회 등을 실시
  - 저스티스 리그는 서울·부산 두차례 청진기 투어를 통해 정시확대를 갈망하는 현장의 목

소리를 확인했고, 당 교육위도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입시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

- 의원총회(10.22)에서 정시 수능전형 비율 50% 이상을 당론으로 확정하였으며, 당론 법안 발의(11.13)

정책 방향 및 과제

- 정시 수능전형 비율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당론발의 및 중점추진
  - 일반전형에서 수능위주 전형이 50% 넘도록 의무화
  - 입학전형자료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수능위주 전형 근거 마련
  - 변별력 있는 수능성적(원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등) 제공 의무화
  - 기회균형 전형 인원수 확대 권장
  - 다만, 학생 충원 어려운 대학 사정 고려하여 적용
- 대입 수시 전형을 단순화하고, 특히, 수시 전형 중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
  - 대학입시 학사 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즉각 교육부 지원 중단 및 향후 지원정책에서 완전 배제도 검토
- 소외계층 선발 확대
  - 성적 이외의 요소를 종합적·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고유한 특성을 교육소외계층 선발에 적극 활용
  - 정원 내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늘리는 대학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
- 대입정보 격차 해소 및 사교육 컨설팅 의존도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입정보 제공
  - 국가차원의 전문 진학상담채널 구축

2 | 사교육비

비전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비 경감

배경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사교육비 급증
  - 통계청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19.3.12) 사교육 총액,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 기록

  * 사교육 총액 : ('17) 18조7000억원 → ('18) 19조5000억원(4.4%↑)
  *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 : (초등학교) 3.7%↑ (중학교) 7.1%↑ (고등학교) 12.8%↑
  * 모든 학생 포함한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 ('17) 27만2000원 → ('18) 29만1000원(7.0%↑)

-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시험 없고, 숙제 없고, 훈육 없는 3無 학교로 공교육 추락

  * 예, 9시 등교, 혁신학교 확대, 숙제 폐지, 학업성취도평가 및 중간·기말고사 폐지,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

정책 방향 및 과제

- 공교육 추락에 원인이 되는 진보좌파 교육감의 실패 정책들에 대한 분석 및 폐지 추진
- 우수한 사교육 모델 및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공교육에의 도입 및 적용 지원

3 | 평생교육

비전 국민행복 및 재기의 기반 평생교육

배경

- 평생교육 기회 및 참여율이 점차 개선되었지만, 전통적인 문해교육, 취미, 여가 등의 교육프로그램에 역점을 두어 점차 늘어나는 다양한 평생교육의 요구에 많이 미흡한 실정
- 특히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업군 종사자 등의 직업교육 기회 및 인프라 부족
- 국민 전체의 평생학습 참여가 저조하고, 특히 인생 후반기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가 미흡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정책 방향 및 과제

-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배우고,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 제2의 직업생활을 위한 직업전문성 신장 인프라 확충(국가가 주도)
  - 인생 후반기 여가 및 봉사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서비스 지원 (기초지자체 중심)
- 자영업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평생직업능력개발 가능한 교육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지원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업군(요식협회, 택시협회, 미용협회 등)의 직업능력 개발비 지원
-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 기반 구축 강화
-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확대 및 성인 친화적 고등교육분야 평생교육 강화
- 학점은행제 개편 추진 : 특히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과 학위 취득을 병행할 수 있는 표준교육과정 확대, 대학수준의 NCS 학습모듈 교재를 활용한 이수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근거 마련

Ⅳ 교육행정체계 개혁

1 | 교육감 선거

비전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배경

-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 유권자 무관심에서 오는 깜깜이 선거, 선거법 위반 교육감들 속출, 일선 교육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큼
-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청과 시·도의 통합을 전제로 과도기로 도입된 정치적 산물
  - 2006년 교육감직선제를 도입할 때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반대를 무마키 위해 제시된 방안이었고, 한나라당은 교육위원회를 시·도 상임위에 통합하여 의결기관을 우선 통합한 후에 다음 단계로 시·도와 교육청을 통합할 계획으로 직선제를 수용했음
  - 그러나 그 이후 진보좌파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교육감으로 당선됨에 따라 교육감직선제는 선거제도로서 견고해짐

    * 친전교조 교육감 비율 : ('10년) 6명/16명 → ('14년) 13명/17명 → ('18년) 14명/17명
- 시·도교육청은 하나의 자치주체로 존립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수단을 갖추기 위한 인사고권과 재정고권이 매우 취약
  - 교사는 국가공무원인데다가 자체수입은 3% 미만이던 자체수입비중도 고교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거의 零의 수준에 이름
  - 그러나 교육감들은 교육부는 대학과 평생교육에 집중하고 초중등 사무는 시·도교육청에 이관을 지속적으로 요구

정책 방향 및 과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제도 도입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김한표의원, 2019.9.9.)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

청년 정책비전

공정한 경쟁기회, 도전하는 청년

I 개요
1 비전 및 목표
2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II 이슈별 정책비전
1 공정
2 1인가구 등
3 청년수당 등 청년정책

I 개요

1 | 비전 및 목표

공정한 경쟁기회, 도전하는 청년

1 공정	공정경쟁 대한민국, Fair Play 대한민국
2 1인가구 등	[취향저격] 소중한 당신 (네가 중요해, 바보야!)
3 청년수당등청년정책	수당 대신 좋은 일자리 (청년수당은 청년이 갚아야 할 대출금)

2 |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자유한국당
국민과 동상이몽 상태의 정부	공정	공정경쟁 대한민국, Fair play 대한민국
세대·지역·이념 갈등 부추기는 천편일률적 복지정책 남발	1인가구 등	[취향저격] 소중한 당신 (네가 중요해, 바보야!)
청년세대를 담보로 한 빚보증 늘리기	청년수당 등 청년정책	수당 대신 좋은 일자리 (청년수당은 청년이 갚아야 할 대출금)

II 이슈별 정책비전

1 | 공정

배경

- 청년의 다수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함. 최근 조국 사태에서 2030세대가 분노한 이유도 위법성 여부가 아닌 공정성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
-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2030세대는 경쟁에서 항상 승리할 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패배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지는 것*을 선호

  *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경기에 임한 사람과 팀에 대해 응원과 지지의사를 표명하지만 승리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편파적인 판정엔 극도로 혐오 표시

- 평창올림픽과 러시아월드컵 당시 SNS에서 주로 언급되던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키워드에서 볼 수 있듯 청년세대는 결과보다 '과정'과 '노력'의 가치를 중시

비전 및 메시지

비전

공정경쟁 대한민국, fair play 대한민국!

메시지

대입제도, 국가고시, 공기업 공공기관 충원제도, 노조 고용세습,
불법과 탈법 관행 등을 혁파해 청년에게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좌파 기득권 세력의 위선적, 불공정 플레이에 맞섭시다!

정책 방향 및 과제

- 채용비리 처벌 관련 개정안 중점 처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 「고용정책기본법(개)」 등
  -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검토
- 이념 편향적 법 집행·공공분야 인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 당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채용비리 범죄 명시 및 자녀 등 친인척 채용비리, 입시비리 밝혀지면 공천에서 배제
- 저스티스 리그 중심의 현장 행보

참고 **1. 문재인 정부의 '기회박탈' 사례**

① 무리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부작용 심각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은 것은 해당 정규직 채용 기회가 모두에게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

-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법 정규직 전환 및 친인척 끼워넣기가 만연했으나, 정부는 이를 정치적 공세로 치부함
- 공공기관 부당해고 소송 42건 중 31건이 사측이 승소함. 그러나 민노총은 파업으로 고용을 강요하고, 노동청을 통해 사측을 압박함
-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함. 그러나 블라인드 채용은 일부 노조와 특권층의 불법채용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2019년 공공기관 인건비는 28.4조원으로 16년 23조에 비해 급증했고, 순이익은 1.1조원으로 현 정부 출범 전(15.4조)과 비교해 93%가 증발함

- 부채비율 8764%인 공공기관(한국국제협력단)을 정규직 채용을 많이 했다고 모범 공공기관으로 선정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향후 국민 부담이 될 것

②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단체협약 여전히 잔존

과거 정부의 자율개선 권고로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설치 후 15대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고용세습은 언급이 없고 보수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천명함

③ 평창 올림픽에서 불거진 기회의 불공정 논란

평창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최근 여권 일각에서의 도쿄 올림픽 보이콧 주장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스포츠를 이용한다는 비판

- 스포츠 정신과는 별개로 특히 2030세대에게 기회의 불공정으로 인식됨

참고 2. 문재인 정부의 '이념편향' 사례

①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이념 편향성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법치주의 무력화에 노력함

-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함
- 19년 상반기 압수수색은 소위 적폐수사가 한창이던 작년보다도 20% 증가
-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
- 재판관의 판결을 당리당략으로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행태가 만연

② 코드인사로 표출된 이념편향

이념 편향적 국정 운영은 무리한 인사권 행사로도 표출됨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행정부 곳곳에도 민변을 위시한 좌파성향 법조인을 요직에 임명 강행
- 통계청장의 전격 교체는 정권 유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
- 최근 검찰은 검란(檢亂)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파행적인 인사가 이뤄짐

③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공정경쟁 저해 우려

표현·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이중성

-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일정을 비판한 중앙일보 칼럼을 청와대가 정정을 요청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중성을 보임
- 편향적인 언론 정책에 반발, 자유한국당은 KBS 수신거부를 전개하였음
- 언론 장악은 다가올 총선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 역할을 할 우려가 높음. 실제 방송에서 최소한의 공정성만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보수패널에게 불리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빈번함

④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적개심이 경제위기 불러

정부의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이념적 반감으로 부당경쟁이 발생함

- 현 정부는 '대기업·가맹본부·사업주 등은 절대악 혹은 갑, 중소기업·가맹점·근로자 등은 절대선 혹은 을' 프레임으로만 평가하는 이념적 편견이 강함
- 이외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토지공개념 등 시장경제원리를 부정하는 일련의 정책과 발언이 지속됨

참고

3. 문재인 정부의 '부정보상' 사례

① 김제동 고액 강연료가 불러온 공정한 보상 논쟁

김제동 고액 강연료에 청년이 크게 반발한 것은 공정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

- 김제동이 최근 2년간 지자체에서 강연료 명목으로 2.7억 원을 수령한 것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가 진행
- 현 정권 집권 직후 KBS에서 3% 시청률에도 연간 7억의 출연료 수령
- "목수의 망치와 법관의 망치는 동일한 가치"라는 발언 등으로 청년층에 영향력을 끼치던 것과는 상충되는 행동이 부메랑이 됨
- 특정 이념 편향적 발언으로 부당한 특혜·보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

② 조국사태로 드러난 386 운동권 세력의 이중성

조국 후보 논란은 문재인 정부 및 운동권 세력의 이중성에 대한 환멸·분노

- 국제 논문 제1저자·유엔 인턴 등 서민 부모는 꿈도 못 꿀 산을 부모가 만들어준 '황금스펙'으로 가뿐히 넘어버린 셈
- 정치 입문 전부터 파워 트위터리언으로서 공정성 영역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가 확인되고, 특히 현 정권 및 여당의 핵심 지지층들도 동요
-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 지키기에 사활을 걸었으나, 결국 조국 전 장관은 낙마

③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이중적 행태

위 사안들 외에도 현 정부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이었음

- 정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고액, 국토부 시세의 57.7%에 불과(19년 7월)
- 청와대 고위인사 45명 중 13명이 다주택 보유자(19년 3월)
- 부동산 안정화를 기치로 최고 규제를 쏟아낸 정부의 이중성에 환멸감 확산
-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된 인사는 이미 22명으로 역대급
- 국정 설문조사 인사 정책 3.9점. 특히 전문가 1/3은 1점 부여(19년 4월 경실련)

2 | 1인 가구 등

배경

- KPMG의 '2018 Global CEO Outlook'에 따르면, 글로벌 CEO의 45%가 밀레니얼 세대의 요구가 기존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 중
- 대한민국 청년2030은 밀레니얼 세대로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이자 잠재적 경제주체임
  -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 및 트렌드가 변화
-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多플랫폼 多콘텐츠 환경으로 변화
  - 덕질의 세분화, 덕업일치, 유튜브 크리에디터 등 취향 존중의 중요성 높아지고 있음
- 학연·지연·혈연 등 '소속' 중심의 사회적 관계가 아닌 '취향' 중심의 사회적 관계 선호
- 그러나 아직 사회나 기성세대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하고 있어 갈등이 유발
  ex) 기성세대 '꼰대', 공무원 강요 문화, 학연·지연 문화, 수직문화 등
-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은 보편적 복지 정책과 천편일률적인 청년 주택공급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 의문
  ⋯›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밀레니얼 특성을 반영 必

비전 및 메시지

비전

[취향저격] 소중한 당신(네가 중요해, 바보야!)

메시지

-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고 기성 세대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 자유한국당 청년정책은 다양한 취향의 존중과 충족을 지향하겠습니다.
- 획일적인 청년지원정책이 아닌 핀셋 정책으로 다양한 청년 트렌드를 반영하고, 1인 가구, 출산과 육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 「청년기본법」 중점 추진
-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확대
  -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코리빙, 코워킹 공간 확대
  - 노년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시설과 코리빙 공간 확대
  -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심' 거주정책 지원
  - 1인 가구 실태파악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저스티스 리그 중심의 2030세대와의 신뢰쌓기 행보 추진

3 | 청년수당 등 청년정책

배경

- 직장 생활 청년들은 자신의 노력에 따른 성과물을 상사가 가로채는 현상을 '내 등에 빨대 꽂았다'로 표현하고 있고, 청년들은 이러한 사회현상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세금주도성장과 재정확대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되었고, 이는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부담(빚)을 전가하는 것으로 마치 미래의 재산을 끌어 쓰는 형국. 이는 세대 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개선돼야 함

  ex) '지속가능 대한민국 평가보고서'
-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 현 주소는 청년 희생 강요 정책임
  - 국가채무비율(40% 이상)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국가의 재정건전성 악화
  - 세대 간 연대를 전제로 만든 국민연금 재정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7년이면 고갈 위기(국민연금공단 2019년 재정추계)
  - 고령화·저출산 심화로 노년부양비 20.5%로 급증, 생산연령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심각한 상황(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 19.8.30 발표)
  - 고용보험 기금 재정 악화가 이어지자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인상
- 역대 정부는 청년세대의 중요성을 낮게 봄. 청년층이 손해 보는 정책에 대해 국민(특히 청년)에게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않았음. 국가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권리와 책임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야 함

비전 및 메시지

비전

수당 대신 좋은 일자리(청년수당은 청년이 갚아야 할 대출금)

메시지

-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입니다.
- 좌파정권이 우리 청년들의 등에 꽂은 빨대를 뽑아내겠습니다.
- 청년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성과 가로채기 Stop!
  연령·직급이 아닌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도전하는 청년을 지원해 청년이 자립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 미래세대가 누릴 권리와 책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 정비
- 능력과 성과가 존중받는 인사·근로시스템 마련
- 저스티스 리그 중심의 현장 행보 추진

참고 **4. 문재인 정부의 '청년 등 빨대 꽂기' 사례**

① 청년 세대를 담보로 빚보증 늘리기

2019년 예산 476조3천억 원(추가경정예산 포함). 2020년부터는 적자예산(수입<지출)
국가채무 40% 돌파 예상(2019년 국가채무비율 29.5%), 재정건전성 문제 심화.

지난 3년간 세수 풍년이여서 세율 인상은 없었지만, 올해 7월까지의 국세수입은 189조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천억 원 줄어 듦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정이 세금 안올리고 감당될 수 있을지 의문. 문재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19.5.16)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란 근거가 뭐냐'고 따지면서 과감한 재정 확대 주문
2018년 우리나라 국민(세금)부담률이 26.8%로 집계(국회예산정책처 '2019 조세수첩') 전년(25.4%) 대비 1.4%p 오른 것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았음
국민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② 집권기간 연금 수령자만 국민인가? 국민연금 개혁 손 놓은 정부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 지급 시기 등 전반적인 연금 제도 개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20년 동안 보험료를 2배로 올리지 않으면 제도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임. 국민연금을 지금이라도 수술하지 않으면 이미 커질 만큼 커진 종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경고이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 공약 (현재 40년 가입 기준 45%)

③ 세금 걷어 나라 곳간은 풍년, 서민 주머니는 빈곤

2018년 정부가 거둬들인 초과 세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 4000억 원에 달함

-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 원천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거래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임

지난해 소득세는 전년 대비 9조 4000억 원이 늘어난 84조 5000억 원이 걷혔고, 법인세의 경우 11조 8000억 원 증가한 70조 9000억 원이 걷혔음

④ 고용보험기금 2024년 고갈 위기

2019년 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7200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8% 늘어남. 2019년 연간 지급액도 8조 원 넘길 것으로 예상됨. 지난해까지 쌓아둔 적립금 5조5천여억 원이 5년 뒤 모두 고갈될 위기

올해 10월부터 고용보험료는 현재보다 23% 올라 직장인은 연간 고용보험료를 6만3천원, 사업주는 36만6천원 더 내야 함

⑤ 청년 일자리 개선 의지 Zero, 땜방식 노인 일자리만 증가

2019년 10월 고용률은 67.3%로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래 10월 기준으로 최고치이나, 실업률은 3.0%로 10월 기준으로 2013년 10월 이후 최저치이며, 청년 실업률(7.2%)도 2012년 10월 이래 최저치임

증가한 취업자 수 41만9000명 중 60세 이상이 무려 41만7000명인 반면, 경제 허리인 40대는 취업자 수가 14만6000명 감소하여,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노인 일자리만 증가하였음을 보여줌.

여성사회 정책비전

동등하고 당당한 여성, 따뜻한 배려와 소통

I 개요
1 비전 및 목표
2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II 여성분야
1 여성안전
2 양성평등

III 기타 사회분야
1 아동학대
2 저출산 문제
3 젠더 갈등
4 노인
5 장애인

I 개요

1 | 비전 및 목표

동등하고 당당한 여성,
따뜻한 배려와 소통

여성

1 여성안전

안전하고 존중받는 여성

2 양성평등

공정한 양성평등

기타사회

1 아동학대

아동 공공보호체계 수립으로
행복한 아이들

2 저출산문제

행복한 출산과 육아

3 젠더갈등

소통과 양성평등으로
상호존중하는 남녀

4 노인

일과 휴식을
선택할 수 있는 노후

5 장애인

배려와 동반

2 |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자유한국당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보다 가정유지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 신종 성범죄·성폭력 대응에 손 놓은 정부	여성안전	**안전하고 존중받는 여성**
OECD 국가 29개국 중 유리지수 꼴지 국가	양성평등	**공정한 양성평등**
기타사회		
선진국과 반대로 가는 대한민국 아동보호체계	아동학대	**아동 공공보호체계 수립으로 행복한 아이들**
13년간 150조원 세금 쏟아 붓고도 효과는 '0'	저출산문제	**행복한 출산과 육아**
젠더문제 해결하겠다며 젠더갈등 부추긴 정부	젠더갈등	**소통과 양성평등으로 상호 존중하는 남녀**
나쁜 일자리, 빈곤하고 외로운 노후	노인	**일과 휴식을 선택할 수 있는 노후**
선심성 시혜성 정책	장애인	**배려와 동반**

Ⅱ 여성분야

1 | 여성안전

배경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성폭력 추방 주간, 2016년부터 가정폭력 추방 주간을 정해 매년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있음

-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4만 8,660건으로, 그 중 4만 1,905건이 검거됨. 이는 전년 대비 138.7%인 3,322건이 증가한 것으로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2016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수치임
- 디지털 성범죄와 데이트폭력 등 신종 성범죄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 적발 4,584건(2018.7.31. 방송통신위원회)**

*** 카메라 등을 이용 불법촬영 범죄 현황 - ('12) 2,400건 → ('13) 4,823건→ ('14) 6,623건 → ('15) 7,623건 → ('16) 5,185건 → ('17) 6470건**

***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16) 9,364건 → ('17) 14,136건 → ('18) 18,671건**

① 가정폭력 예방 대책 현황

■ **국가적 차원의 가정폭력 대응방안 모색 부족**

- 폭력예방 등에 관한 예산의 안정성 부족
- 폭력대응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법제도 정비 등 필요조치 미비

■ **한국사회의 가정폭력 인식변화 선도 부족**

- 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정당성과 당위성 획득은 인권의식 성장, 여성주의 발전 등과 같은 사회 분위기와 여성단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변화된 점을 직시, 사회교육 분위기 형성 필요

■ 가정폭력 대처와 여성인권 보호체계 구축 필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부족 현상(전국 70여개)
- 2016년 기준 성폭력통합상담소(전국 25개), 여성의 전화(전국 18개) 운영
  * 부족한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기관수는 피해 여성들의 서비스 접근과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 요구

- 명확한 개념과 용어의 정리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인권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전환
-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발, 예산확보, 전문성강화 등
  * 가정폭력 경험 시 실제로 사법체계에 적극 도움 요청 비율 매우 낮음

② 성폭력·성범죄 대책 현황

■ 신종 성범죄 관련 통계도 입법도 전무한 상황

- 신종 성범죄의 경우 별도의 입법이 없어 체계적인 통계나 현황 관리가 부재 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 많음. 처벌이 약하다보니 재범율도 높음. 데이트폭력의 경우 재범률이 76%에 달하고, 몰카 범죄의 경우 54%에 달함. 최근에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하는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음

■ 정부의 안일한 대책 논란

- 신종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지 한참이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함. 작년 2월 정부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같은 피해자에게 세 번 이상 폭력을 휘두르면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는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를 대책으로 내놨지만 한 번 만에 맞아죽으면 어떡하냐는 빈축을 삼. 뿐만 아니라 당시 발표했던 스토킹처벌법 제정,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등의 대책이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 허울뿐인 대책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비전 및 메시지

비전 안전하고 존중받는 여성

메시지 여성대상 범죄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효과적인 전담 예방, 엄정한 처벌, 그리고 촘촘한 안전망 지원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대책의 강력 실행으로 여성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 ‘가정폭력OUT 3법’ 추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개)」, 「다문화가족지원법(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
- 가정폭력은 집안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 전환
  - 보호관찰자(가해자)의 교정(재발방지) 교육 강화
- 가정 보호에 우선하여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기관의 대응 법적 마련
  - 영국 버밍엄市, 2018년 ‘가정폭력 방지 전략’ 공표
    : 인식변화→초기대응→보호지원의 3단계 가정폭력 방지 전략
- 가정폭력 발생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처벌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사각지대 파악을 통한 제도적 지원 방안 확대
- 성범죄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확대
- 신종 성범죄 관련 처벌 강화
- 여성폭력방지 차원에서 신종 성범죄 총괄 컨트롤타워 설립 추진

2 | 양성평등

배경

-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시작으로 1990년대 성폭력법, 가정폭력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었고, 2001년에는 여성부가 출범하며,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함
- 문재인 정부는 여성 고위공무원·임원 비율을 확대(중앙정부 10%, 지자체·공공기관 각 20%)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정부·공공기관 84곳은 국정과제를 외면하고 있음
  - 여성 고위공무원이나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은 △중앙정부 6곳 △광역지자체 5곳 △기초자치단체 5곳 △공공기관 68곳 등 총 84곳(이하 작년 말 기준)에 달함
-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9 유리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우리나라는 OECD 29개 회원국 중 6년 연속 꼴찌를 기록
  - 여성의 임금이 남성과 비교할 때 34.6%나 적어 최하위며 여성 관리자 비율도 12.5%로 최하위, 여성 기업이사 비율도 2.3%로 최하위를 기록. 노동참여 인구의 남녀 비율 차 또한 20.3%포인트로 바닥권인 28위로 나타남
- 여성의 사회 진출 촉진은 저성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일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을 20년간 연평균 0.3~0.4%포인트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
  -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 수준으로 높아지면 GDP가 2017년 대비 14.4% 증가할 것으로 전망

비전 및 메시지

비전 **공정한 양성평등**

메시지 여성들이 경력단절, 유리천장, 남녀 임금격차, 부정적 인식 등을 깨고 경제 활동의 동등한 주체로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차별 없는 공정한 양성평등 실현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 공무원 채용에서 5년 단위 한시 운영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속 시행
- 중앙정부, 지자체·공공기관의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위반 시 처벌 강화
-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 여군 군 문호 개방 확대로 여성의 군 진입 및 인권신장 추구
- 여성이사 (임원) 할당제 도입 검토

III 기타 사회분야

1 | 아동학대

배경

① 아동학대 사례 지속적 증가

- 매년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10,027건이었던 아동학대는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② 주요 선진국과 반대로 가고 있는 아동보호체계

- 여러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가 '공공이 아닌 민간 중심, 예방이 아닌 처벌 위주'라는 점을 오랫동안 지적해왔음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공중심, 예방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그 방향이 정반대를 향하고 있는 것임
- 전 정부(2014년)에서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점을 확실시하고 신고의무자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아동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 공공의 개입을 확대한 점은 그나마 진일보 한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조사와 처벌 위주의 대책이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음

③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

- 아동복지법이 개정(2000년)되어 아동학대의 정의가 법에 규정된지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동보호 업무가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등 부처간 혼재되어 있고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아동정책조정위'는 일년에 겨우 두어번 개최되는 등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장의 활동가들도 아동정책조정위의 효과성에 대해 2.4%만이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63.5%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비전 및 메시지

비전 **아동 공공보호체계 수립으로 행복한 아이들**

메시지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공공중심, 예방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 학대행위자 대상별, 유형별, 상황별 분석을 통한 맞춤형 예방 홍보
- 출생직후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교육과 안전교육 등 아이가 태어남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 상습범죄자 등에 대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대상 범죄에 포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

2 | 저출산문제

배경

①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역대 최저. 인구절벽 도래

-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2.06명으로 대체출산율 수준 이하로 하락하여 저출산 국가에 진입, 2002년에는 1.18명으로 하락하여 합계출산율 1.30명 이하인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
- 출생아 수는 1983년 77만명, 2001년 56만명, 2010년 47만명, 2017년 36만명 수준으로 현재의 출생아 수가 1983년의 절반에도 못 미침
  - 2019년 현재 합계출산율 0.98명 진입
  - 1일 평균 출생아 수도 2017년에 980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 이하로 감소
- 201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낮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인 1.68명에 비해 0.51명이 낮음.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초저출산국가

②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0조원 넘는 예산 소요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부터 5년씩 구간 나눠 계획추진해왔음. 현재는 제3차 기본계획(2016~2020년) 구간
- 그동안 쓴 152.9조원 항목 별로 분류해보니, 절반 가까이가 상관없는 곳에 쓰였음
  -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1,907억원), 청년 해외취업 지원(424억원), 대학 인문역량 강화(425억원), 자유학기제, 청소년 동아리나 축제 지원 예산, SW 전문인력 양성 예산도 저출산 예산 안에 책정하여, 13년간 세금 쏟아 붓고도 효과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

③ 아이가 간절한 난임 부부에게는 야속한 지원

- 난임 인구 20만명 시대로 국내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더 이상 개인의 문제 아닌 사회적 문제
- 연령기준 폐지, 난임휴가 3일 등 난임지원 늘고 있으나, 시술비 지원횟수 제한이 가장 큰 벽임
  -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지원 제한. 임신 환경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 지원효과 미미함
- 점차 혼인 및 출산연령 상향으로 난임 부부, 고위험 산모 늘어가는 추세를 반영해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모에게 직접적인 출산 및 돌봄 지원이 더욱 필요

④ 대기업 근로시간 관리제, 유연근무제도 도입 등 직장 내 워라밸 제도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도는 떨어지는 현실

- 2017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결과, 부담없이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47.5%에 불과
  - 육아휴직 어려운 이유로, 동료 근로자의 업무부담, 노동자가 매우 적음, 개별 고유 업무로 어려움, 소득감소 우려, 대체인력 채용 곤란,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 경영상 여건 등이 꼽혔음
  - 2019 국가인권위원회 '임신·출산·육아 차별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 사용자의 20.5%는 복직 후 다른 부서로 재배치 경험함. 18.8%는 인사나 승진에 차별 받았다고 답함
  - 특히 대기업, 공무원(공공기관)에 비해 중소규모 기업, 개인사업자는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많음

⑤ 여성들의 경력단절 비율 해마다 높아져

- 엄마 10명 중 4명은 육아로 일 그만 둠. 육아정책연구소 '2018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 0~6세 아이 엄마 중 육아로 직장 그만둔 경험 있는 경우 40.3%
  - 여성 경력단절 경험 2009년 24.6%, 2012년 25.2%, 2015년 32.3%에서 지난해 8%p 증가한 40.3%
  - 정부 보육지원 확대와 기업의 육아휴직 문화 개선 노력에도 여성의 경력 단절 증가 추세 줄지 않고 있음

비전 및 메시지

비전 행복한 출산과 육아

메시지

- 저출산은 출산 장려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닌, 돌봄 권리의 실현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모든 부모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일·가정 양립으로 '나'와 '일' 그리고 '가정' 모두가 존립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 모든 아이들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삶을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출산이 삶의 질 상승의 기회가 되는 나라, 양육과 육아의 기쁨이 더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서겠습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총괄 정책 관련

- 총리실 산하 인구행복청(기구) 신설로 예산 및 행정 총괄
- 임신·출산·양육 부모에게 스마트한 정보제공

임신·출산 관련

- 임산부 건강 지원 확대
  - 보건소 주1회 야간 진료 및 월 1회 토요일 오전 진료 시행 의무화
  - 산모의 산전검사 지원 의무화
  - 출산 후 산모 정기 건강진단 도입
  - 산후조리 비용의 소득공제 규정 등
- 난임부부 전폭적인 지원
  - 「모자보건법(개)」
- 출생-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출산 전용 예산트랙 법제화 실시

양육 관련

- 고용보험기금 외 별도 사회보험기금 조성해 모성보호 급여 안정적으로 보장

- 출산 휴가·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 무직자 등도 육아휴직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 어린이집, 유치원의 24시간/4교대 돌봄 시스템 구축,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
- 독박육아에서 멀티워크 프레임 확산

경력 관리 관련

- 내일배움카드 등에서 지원되는 내용과 범위 확대
- 다양한 여성 코워킹 스페이스, 여성 창업지원센터 등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워라블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ex) 나만의 책 만들기 과정, 작은 집 홈 스타일링 과정, 앱 개발-플루터 과정 등 놀이처럼 일을 배우고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경력유보여성으로 인식과 용어 전환
- 양질의 잡 크래프트 교육 지원
-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 교육에서 탈피해 2030 경력유보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소규모로 투입

3 | 젠더갈등

배경

- 심각한 젠더 갈등
  - 온라인 상의 갈등 관련 데이터 분석결과(2016년~2019년 6월), 젠더갈등 관련 내용이 73.6%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념 및 정치갈등(15.4%), 세대갈등(5.5%), 직장 내 갈등(5.5%) 순
  - 젠더 갈등과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 62.0%, 긍정적인 내용 8.0%
- 젠더 갈등은 '성' 대립으로 '상대의 성은 필요 없다'는 식의 극단적 증오로 표출되는 것이 특징

젠더 갈등 촉발 이슈들

① 남성의 의무복무제

- 남성들은 "가능하다면 군대에 안 가는 게 좋다(82.6%), 군 복무는 시간 낭비(68.2%)"로 인식함. 인정은 없고, 의무만 부여하는 것에 대한 반감
- 남성의 의식 기저에 깔린 억울함 정서는 젠더 갈등에서 기폭제 역할
- 문재인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고위공직자 자녀의 이중국적 등은 의무복무제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과 분노를 증폭시킴

② 성범죄와 판결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온도차

-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17배 많고, 여성긴급전화 이용 건수는 29만여 건에 이름
-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여성은 50.9%가 불안을 느낌(2018 통계청). 반면, 남성은 성범죄 법 집행이 여성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지지율 대폭 하락의 원인으로 '20대 남성 현상'을 지목하였고, 이는 20대 남성이 문재인 정부를 여성편향적 정부로 생각했기 때문

③ 리얼돌(real doll)

- 여성의 신체를 재현한 성인용 인형의 수입판매 금지 청원에 한달간 26만명이 넘는 여성들이 동의하였고, 일부 여성과 남성 간 성대결 조짐이 나타남

비전 및 메시지

비전 소통과 양성평등으로 상호 존중하는 남녀

메시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책이 오히려 젠더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느 한쪽 편이 아니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소통을 통해 남녀가 상호 존중하며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 젠더갈등 완화를 위한 포지티브 정책 마련

4 | 노인

배경

- 노인 문제는 더 이상 한 가정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대두됨
  -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 그리고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37.3%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년생~1963년생)가 노인층에 본격적으로 진입함에 따라 인구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평균수명의 연장과 조기퇴직의 증가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제2의 인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고령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사실상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상태임. 노인 자살률 역시 10만명 당 54.8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 지난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함께 받은 사람 가운데 95%는 월 100만원도 받지 못했으며, 10명 가운데 7.5명은 50만원 이하를 받아, 국민연금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임

비전 및 메시지

비전 일과 휴식을 선택할 수 있는 노후

메시지 자유한국당은 노인복지청을 설립하여 여러 부처에 흩어진 노인 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젊은 세대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복지전달체계 강화 및 맞춤형 노인정책의 효율성 증대
  - 「정부조직법(개)」
- 장기보유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진
  - 「지방세법(개)」
-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추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개)」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심의 단편적인 취업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직무교육, 취업 후 관리까지 통합적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제도 구축
- 전국 시·군·구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확대 설치 및 전문 컨설턴트 배치
- 어르신들에게 특화된 공익분야 활동 지속 발굴
  - 도서관 구연동화 활동, 이주여성 요리도우미 등
- 사회적 기업·공공행정 분야 등에서 어르신의 재능기부 사회공헌 활동 장려

5 | 장애인

배경

-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지원은 비장애인 입장에서 시혜적, 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어, 장애인의 권리 보장성으로 정책 기조 전환 필요
-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장애인 지원 정책은 오히려 장애계의 반발을 부름
  - 문재인 정부, 올해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를 31년 만에 폐지하였으나, 장애계는 '예산 반영 없는 단계적 사기', '가짜 폐지'라며 전국 집중결의대회 개최
    - 장애계, 기존 등급제를 대신하여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인건비 상승 등에 대한 고려 없는 예산 편성으로 인해 오히려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점 등 문제점 지적
- 현행 장애인 관련법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으로의 전환과 같은 장애인 지원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데 한계 존재

비전 및 메시지

비전 **배려와 동반**

메시지 자유한국당은 장애인과 따뜻한 동행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여, 시혜성이 아니라 권리 보장성 정책기조로 전환하고, 비장애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 「장애인권리보장법(제)」 중점 처리
-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 특수교육과 운영 전국대학교에 특수학교 설립
-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
- 모든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급여서비스 제공
- 장애인 콜택시 150명당 1대로 증차
- 공공 교통수단·여객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의무화
- 장애인 근로능력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추진
- 장애인당사자 재난 위기 시 대피 매뉴얼 등 재난안전대책 마련
- 장애인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70세까지 연장 및 가산수당
  - 장애인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 정책비전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지속가능 대한민국

I 개요
1 비전 및 목표
2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II 이슈별 정책비전
1 미세먼지
2 수질, 수자원 관리
3 국토관리

I 개요

1 | 비전 및 목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지속가능 대한민국

1 미세먼지	깨끗한 공기, 숨쉬기 좋은 나라
2 수질, 수자원 관리	맑은 물, 4대강을 넘어 (Beyond 4대강 project)
3 국토관리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이용

2 |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자유한국당
말과 쇼(show)만 있고 실질적 저감에 역행하는 정책	미세먼지	깨끗한 공기, 숨쉬기 좋은 나라
정치보복 4대강 보 해체	수질,수자원 관리	맑은 물, 4대강을 넘어 (Beyond 4대강 project)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포퓰리즘으로 난개발과 국토파괴	국토관리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이용

II 이슈별 정책비전

1 | 미세먼지

배경

- 문재인 정부,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하고 나쁨 일수를 70% 줄이겠다고 목표 설정
  -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는 추세지만 고농도(50㎍/㎥ 기준) 발생일수가 증가하는 경향
  - 지난해 한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m^3당 243㎍
  - 서울·경기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북, 전북, 충남, 세종 등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높아지고 있음
-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규제만 강화
- 미세먼지 감축에 역행하는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및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에너지정책 엇박자
  - 저렴한 전기요금 정책으로 전력수요 관리에도 실패
- 자동차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인하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증하고,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이 낮아 경유 R/V차량의 증가로 인한 오염물질 증가 초래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등의 정책은 실효성 있게 추진하되,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
- 과도한 보조금제도가 오히려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있고,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
  - 노후경유차량 연식 초과 절차를 거칠 경우, 체납액 청산 없이 오히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폐차 가능하여 논란

비전 및 메시지

비전 깨끗한 공기, 숨쉬기 좋은 나라

메시지 미세먼지를 양산하는 환경파괴 탈원전 정책, 중국에는 침묵하고 국민 탓만 하는 정책으로 국민을 숨 막히게 하는 '문세먼지 정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값싼 친환경 원전 재가동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중국발 미세먼지에는 단호한 외교정책을 시행하여 실질적으로 저감하고, 생활형 미세먼지 저감 지원정책으로 숨쉬기 좋은 나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 생활형 미세먼지 저감 지원정책
  - 가정내 미세먼지 해결 용품 지원
  - 인덕션 등 전기레인지, 주방후드,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관련 가전·주방용품 구입비 및 세제 지원
  -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노후 샷시 교체비용 지원 확대 등
-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오염원별 차별화 대책, 지역별 특성화된 정책 수립
  - 탈석탄을 위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한 내연기관차의 단계적 퇴출 검토
- 보조금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시장메커니즘 회복
  - 규제수단 다양화, 대상별 지원방법 차등화
  - 소형 경유차 대비 중대형 경유차 보조금 확대
- 전기요금,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등 가격정책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 에너지 절약 산업구조 전환 및 소비절약 운동 생활화
- 중국 등 인접국가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 대중교통수단의 청정화 선행 등 국민 참여 확대 캠페인 전개

2 | 수질, 수자원 관리

배경

- 문재인 정부, 이념 집착과 前 정부 지우기를 위해 4대강 보 해체 추진
  -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금강·영산강 5개 보 중 3개 해체, 2개 상시개방 결정
-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① 민간위원 8명 모두 4대강 반대론자로 구성하는 편향성, ② 보 철거 결론이 나오도록 비용편익분석을 조작, ③ 22조 2천억 원 투입된 전국사업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예산낭비(4대강 보 개방으로 1,400억 원의 비용 추가필요), ④ 지역주민 의견 무시, ⑤ 보 개방 지속으로 지역 주민과 농민의 물 부족 발생 논란 야기
  - 나주시의회, 세종시의회, 공주시의회 등 금강·영산강 수계 全 지역이 보 해체 반대 결의문 채택 혹은 반대 성명 발표
  - 여당 당대표까지 반대하는 상황
- 물관리 일원화 이후 종합적인 수자원 개발과 이용 및 보존과 관련된 대책 없음

비전 및 메시지

비전 맑은 물, 4대강을 넘어(Beyond 4대강 project)

메시지 주민의견은 무시한 채, 정치보복을 위한 4대강 보 해체에 맞서 비정치적, 미래지향적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류지천 비점오염원 종합관리 대책으로 더 맑은 물, 더 깨끗한 물을 건설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 및 체계 정립

- 관련 법제 및 각종 계획의 체계화 및 정비

4대강을 넘어 물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방안 제시

- 유역별 관리체계 정립, 합리적인 보 운영방안 등
- 지류지천 비점오염원 종합관리대책으로 수질관리 획기적 전환

수자원확보 방안의 다양화

- 부산·대구 물 문제, 지방상수도 오염문제 등의 해결방안 제시

3 | 국토관리

배경

신재생에너지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건설을 위한 막대한 예산 소요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의하면 한국전력과 한수원 등 다섯 개 발전 자회사의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5.2GW로,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58조8,000억 원 소요 예상
- 해당 기관들은 지난해 기준 142조8,0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원전 가동률 저하 등으로 부채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

실태조사 한 번 없는 마구잡이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로 환경훼손, 자연생태계 파괴와 오염, 수익배분 문제 등으로 주민 반발 극심

-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지난해 태양광 시설로 인해 사라진 전국 산림과 숲 면적은 2,443만ha로 축구장 3,300개, 여의도 면적(290㎡)의 8.4배에 달하며, 산지 훼손으로 인한 붕괴사고 발생
- 태양광패널 자체나 패널 세척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 발생 우려
- 사업자와 주민반대로 이를 막으려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소송 급증 (2014년 7건 → 2018년 102건)
- 태양광을 도로나 주거지역에서 100~1,000m 떨어뜨려 지어야 한다며 규제 강화하는 지자체 증가(2017년 54곳 → 2018년 91곳)

정부여당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에 풍력발전시설 건설을 내용으로 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자,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던 환경단체들도 돌아서고 있음

- 환경운동연합은 "입지규제 완화에 보다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논평 발표
- '생명의 숲'은 "엄격하게 규제했던 인공조림지를 풍력발전시설지로 풀어주는 것은 산림 보호의 필요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

-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원전보다 높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될수록 전력요금 인상은 불가피함
- 태양광 사업 관련, KBS '시사기획 창'이 보도한 '태양광 발전 사업 복마전' 재방 보류를 두고 청와대 외압 논란

국토 개발

- 문재인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 사전 검토조차 없이 포퓰리즘적으로 국토개발 사업 남발
  -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 명분을 내세워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방안 확정 발표(19.1.29)
- 예타는 김대중 정부 때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예타를 면제받은 4대강 사업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타 강화를 주장해왔음
  - "대규모 사업일수록 절차를 중시해야 합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평가를 받아야합니다"(문재인 대통령 저서 《사람이 먼저다(12.7월)》 中)
- 정부여당의 이번 예타 면제 정책은 혈세낭비 뿐 아니라 무분별한 사업으로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기타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정치권도 입김을 넣는 반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정부의 탁상행정, 늑장대응으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음
  - 중국이 2017년 7월부터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했고, 실제 지난해 1월부터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24종을 수입 중단하였음에도 정부에서 대책 마련 없이 수수방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쓰레기 대란 발생
  - 필리핀으로 수출되었던 폐플라스틱 쓰레기가 반송되어 오는 등 국제적인 망신
  - 플라스틱은 그동안 고형연료화 등을 통한 재활용을 추진해 왔으나, 고형연료화 정책의 실패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

이외에도 현장무시 부실환경 정책으로 문제 발생

- 영농폐비닐 처리시설 등 환경관련 시설 설비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 해양에서의 미세플라스틱으로 환경오염 문제 심각
- 소각시설 부족 등으로 요양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증대에 대처하지 못해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및 감염가능성 우려
- 지자체에 관리를 전가하여 제도적 부실 위험
- 예산 및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제도 및 시설 관리 미비

비전 및 메시지

비전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이용

메시지

이념에 휘둘린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무분별 확대, 난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포퓰리즘적 국토개발 사업 남발의 피해가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금수강산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토개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신(新) 국토환경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우리강산 금수강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책 방향 및 과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정립

- 공공성과 지역이익의 상충 시에 대한 평가방향 지침 등
-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는 영향평가 대행업체 영구 퇴출 및 이를 방조한 사업자 엄벌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정책과의 조화

-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입지에 대한 조화로운 정책 개발

플라스틱 폐기물의 100%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

- 제품의 생산 및 소비 시스템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시스템 전반을 개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명확화 및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 전면적 개편 필요

-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 개선 대책 마련
-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시설, R&D 등)
- 전 국토를 쓰레기장화한 방치 폐기물 조속 처리 등

안전 정책비전

안전한 나라, 안심하는 국민

8

I 개요
1 비전 및 목표
2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II 이슈별 비전
1 재난안전관리 제도 개선
2 국가기반시설 관리
3 시민생활안전 강화
4 안전교육훈련 강화
5 재난안전관리자

I 개요

1 | 비전 및 목표

안전한 나라, 안심하는 국민

1 재난안전관리 제도 개선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
2 국가기반시설 관리	이용자 중심의 국가기반시설 관리
3 시민생활안전 강화	AI 기반 통합재난대응 체계 구축
4 안전교육훈련 강화	수요자 중심의 안전교육훈련
5 재난안전관리자	재난안전관리자 역량 강화

2 |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자유한국당
중앙정부 관리자 중심의 사후 복구 체계	재난안전관리 제도 개선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
공급자 중심· 규제 중심의 개별 관리	국가기반시설 관리	**이용자 중심의 국가기반시설 관리**
아날로그식 재난 대응 관리 체계	시민생활안전 강화	**AI기반 통합 재난대응 체계 구축**
체계성 없는 안전교육훈련	안전교육훈련 강화	**수요자 중심의 안전교육훈련**
재난안전관리직 기피	재난안전 관리자	**재난안전관리자 역량 강화**

II 이슈별 정책비전

1 | 재난안전관리 제도 개선

비전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배경

- 중앙정부의 관리자 중심의 관리체계
  - 재난은 지역에서 일어나나 지역의 재난담당자는 매우 적고, 이에 반해 중앙정부의 조직은 큰 역삼각형 구조
- 사후 복구 중심
-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 불명확 등 일사불란한 대응에 한계
  - 통신재난 발생 시 민간통신사업자가 대응하나 지자체 재난대응 계획에는 정보화담당관이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불합리
-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 기능별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 지정 미흡
-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 관리
- 재난안전관리분야 국제표준 통합지원체계 부재
  - 일본의 경우 국제표준화기구 안보와복원 기술위원회(ISO/TC292 Security and Resilience) 국가차원의 민관대표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국제표준활동을 전개
- 일시에 긴급히 필요한 재난대응자원에 대한 긴급지원체계 준비 미흡
  - 지역단위 긴급지원계획 부재
  - 긴급지원을 위한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 지정 미흡
  - 지역 내 민간기관, 자원봉사기관을 아우르는 종합 긴급지원체계 필요

정책 방향 및 과제

- 대통령(또는 국무총리) 직속 가칭 「국가(재난)안전관리 위원회」 설립
- 시군구 중심의 관리체계로 개선하고,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를 위한 방재자원을 지원(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 제고)
- 재난유형별로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의 역할을 분명하게 가름하여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재난을 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지휘 운영체계 마련
-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관리 정책 실행
- 유사시에 대비하여 지역 내 대응역량 확보 및 민관을 아우르는 긴급지원체계 마련
  - 지역별(중앙,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등)로 긴급지원체계 확립
  - 응급복구, 주민대피 등 재난대응 기능별로 자원, 물자, 인력, 기술 등 긴급히 지원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과 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 긴급지원체계가 재난대응계획과 위기관리매뉴얼 등에 연계되도록 수정 반영
- 재난안전관리분야 국제표준 통합지원체계 확립
  -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한국대표단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연합하여 지원하는 지원센터 조직을 구성하여 민관의 국제표준화 도입활동을 지원
  - 개발도상국가들의 국제재난관리표준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인 재난관리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브랜드 창출지원
  - 2019년 9월 현재 ISO/TC292에 위기관리, 공동체 복원, 연속성, 공급망 안전 등 9개 분과위원회로 확장되어 진행중이나 이에 대응하는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2 | 국가기반시설 관리

비전 이용자 중심의 국가기반시설 관리

배경

- 국가기반시설의 범위가 기능연속성에 따라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사고발생 후에도 시설 개선이 되지 않으며, 개선에 소극적
  - 관리운영기관의 이익중심
  - 기관업적 평가제도 상의 문제 포함
- 이용자(국민) 안전은 경시
- 유지관리 예산과 인력, 기술의 절대 부족
- 방재투자를 낭비로 인식하며, 복구 중심의 관리
- 라이프라인시설(수도, 전기, 가스, 전력, 통신 등) 노후도 진단 없음

정책 방향 및 과제

- 생명안전 인프라 뉴딜 정책 추진
  - 1년간 10조씩 10년간 100조를 투자하여 노후 인프라 교체 정비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법 (개)」 처리 추진
- 국가기반시설 정보공유센터(NIISAC) 도입으로 총괄시스템 마련

  * 국가기반시설 정보공유분석센터(NIISAC, National Infrastructure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

  : 도로, 철도, 지하철 등 Life-Line을 중심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관산학연이 협업하여 신속히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지원하는 센터

- 전국 라이프라인시설 노후도·안전도 진단 및 정보공개
- 믿을 수 있는 음용수 제공을 위한 상수도·중수도 정책 연차적 마련
  - 새로 설치할 배관은 상수도로, 기존 상수도는 중수도로 구분하는 방안 검토
- 국가기반시설의 범위 확대
- 계획, 설계 개념을 사용과 유지관리에서 안전 확보 및 이용자 중심의 성능 중심으로 개선
- 선제적 예방적인 방재시설 투자 시행 및 자체 방재기능 강화

3 | 시민생활안전 강화

비전 AI기반 통합 재난대응 체계 구축

배경

- 불산 등 위험물질 유출 시 지역주민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으나, 위험물질 취급 기업에 대한 정보(종류, 저장량 및 사용량, 위험성, 사용처 등)를 지자체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음
- 위험물질 관리의 전문성 절대 부족
- 위험물 누출 시 초기대응 곤란
  - 지역차원의 대응 준비태세 확인 불가
  - 초기대응 소방력 장비부족(구미 불산 누출사고 시 소방관 다수 부상)
-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기능별 주관기관과 지원기관의 지정 미흡 등 긴급지원 체계에 대한 준비 미비
- 시민예경보는 지역중심으로 재난현장의 시민들에게 직접 예경보하는 기능 미비
- 화재로부터 불안전한 건축규정 및 소방시설 소급적용
  - 제천 목욕탕화재(2017.12), 밀양 세종병원화재(2018.1) 등 계기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2022년 8월까지 소급 설치토록 함
  - 대형화재의 원인이 방화시설 미흡 등 건축설비의 문제임에도 소방 문제화하여 소방시설의 소급 적용함(법률 소급적용은 아니함이 원칙)
  - 소급적용 대상이 된 건축물은 적법했으나 불법건축물화 되어 안정성을 신뢰받지 못함
  - 소방시설 소급설치 비용으로 민원 야기
- 재해에 약한 주택규정
  - 단독주택 등의 1층 기준표고가 주택의 전면도로 표고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방범창 설치 및 방풍장 미설치, 지하(반지하 포함) 공간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함
    : 화재시 지상층은 방범창 설치로 지하층은 무창층으로 외부 피난 곤란

: 방풍창 미설치로 태풍 시 건물붕괴 등 위험

- 주택 침수정보 등 이용자(국민) 중심의 정보 제공 부족
- 단독주택과 5층 이하 연립주택의 지하공간 침수방지대책은 거의 전무함
- 건축물 사후관리실태 확인 제도 미흡
  - 건축물 준공 후 사정변경 확인 방법 없음
  - 소유주 등이 함부로 방화구획 제거, 피난통로 장애 설치여부 확인 곤란으로 유사 시 대형 인명사고 발생
- 공공부문에서 설치 활용 중인 CCTV 데이터와, 119 상황실 등 사고신고 접수 DB 등은 사고·재난의 예방 및 피해최소화 등 주민안전을 위해 유용한 데이터이나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소멸되고 있음

정책 방향 및 과제

-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 예측 시스템 구축
  - 전국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신고 DB를 분석,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 선제적 주민안전 정보제공 용도용 공공정보 활용 가능토록 법제도 개선 추진
- 사회재난위험지도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
- 지역재난안전 통합관리 센터 설치
  - 자연재난 이외에 사회재난 및 미래·복합재난 등 포함
  - 재난 유형별 현장 초동 대응기관 명확화
- 주택법 및 건축법 개정
- 도시재난안전 예경보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 안전조명 서비스 제공
  - 성추행 등 범죄안전, 교통사고 등 사고 위험이 발생할 때 현장에서 보안등과 CCTV, 스피커 등을 이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4 | 안전교육훈련 강화

비전 수요자 중심의 안전교육훈련

배경

- 안전체험 교육훈련 실천역량 절대 미흡
  - 생애주기를 무시한 일률적인 교육자료로 어릴 적부터 몸에 익힐 수 있는 교육 제도 미흡
  - 체험교육시설 부족 및 안전교육가 양성과정 절대 미흡
- 생애주기별 국민안전실천역량 조사제도 미비
  -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 따른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에는 조사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예산지원 미흡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 노인 등 6대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범죄안전, 사회기반체계 안전, 자연재난 등 6대 분야 안전실천역량을 제대로 측정한 사례 부족
- 소방기본법에 학생을 상대로 하는 학교교육이나 국민에 대한 홍보제도는 의무교육제도가 아니며, 다중이용업소주 및 종업원에 대한 의무교육제도의 수강자는 극히 일부임

정책 방향 및 과제

- 생애주기별·재난유형별 국민안전실천역량 조사제도 도입 및 국민안전교육 실시
  - 국민안전교육기본법 등 개정으로 생애주기별 안전체험 교육과정 법제화
- 지자체별 기존 과학체험관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국민안전 체험관을 설치하고, 가족단위 체험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국민안전실천역량 진단 및 역량개선사업 전개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 노인 등 6대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범죄안전, 사회기반체계 안전, 자연재난 등 6대 분야 안전실천역량을 측정하여 안전교육 기본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 개선
-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정기적 관리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취업, 입학 등)
  - 점수화(누적 점수에 따른 포상제도, 진학 평가에 반영 등)와 관련 보험 감액 혜택
- 교사 안전 교육으로 안전체험교육가 양성
  - 교육/사범 대학에 방재안전관리 교과정 개발 검토

5 | 재난안전관리자

비전 재난안전관리자 역량 강화

배경

- 재난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승진, 수당, 복지 등)가 전무하여 재난안전관리 직은 기피부서로 인식
- 소방공무원 위험수당 제도 미흡
  - 소방공무원 위험수당 지급 실태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450호) 제13조에 의거하여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험도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은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갑종으로 분류하여 월 6만원의 위험수당 지급

- 위험한 직무(6개 부문)를 위험정도(3개 등급)로 구분하여 지급
  - (6개 부문) 1. 해상 부문, 2. 방역·보건 및 수의 부문, 3. 공업연구 부문, 4. 농수산업연구부문, 5. 소방 부문, 6. 각 부문
  - (지급액) 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

  - 모든 공무원에게 같은 수당규정(대통령령 제29450호)에 따라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소방공무원만 상대적으로 많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신설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 곤란
- 소방공무원은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보험사 측면에서는 Risk가 큰 불량 대상으로 생명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손해보험 가입으로 간접적으로 보전하고 있거나, 보험가입을 포기하고 있음. 생명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담으로 모든 소방공무원이 가입할지 의문

-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충분한 소방예산 확보 곤란
  - 지역별로 소방예산이 큰 차이가 있어, 각종 수당이나 소방장비 등 확보가 곤란함
- 소방용품의 검정제도로 기술향상 부진
  - 제품검사 지연 등으로 민원 야기
  - 성능인증 제도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아니함
- 지역의 재난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역민들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절대 부족
- 자원봉사자 관리 체계가 부족하고, 자원봉사 시 기본 실소요경비(교통비, 식비 등) 조차 지원 부족, 생명신체의 안전·보장 전무
- 안전상식이 부족한 자원봉사자의 경우, 오히려 요 구조자가 될 위험이 있음

정책 방향 및 과제

- 소방공무원 생명수당 도입 소방공무원 신체상해보험, 생명보험 국가 책임제 도입
- 소방예산 확보 : 지자체 예산 중 일정비율 소방예산으로 확보
- 소방용품의 검정제도를 인증제도화하여 최소성능이 아닌 최고 성능품 생산유도
- 최고성능 제품 생산으로 화재로부터 생활안전 제고 및 수출이 가능한 소방용품 생산 가능 ⇒ 소방제품 기술향상 유도
-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운영
- 자원봉사자의 등급 관리방안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사전교육 이수 등으로 자원봉사자 능력 양성(자원봉사자의 등급화)
  - 분야별 자원봉사 등급 관리화로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증대
  - 실 소요경비(교통비, 식비) 지원 및 세금 면제, 공용주차장 무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인센티브 부여

문화예술체육 정책비전

문화와 스포츠로 행복한 일상, 세계인과 함께 하는 한류문화강국

I 개요	1 비전 및 목표 2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II 생활문화, 생활체육 분야	1 격차 해소 2 생애주기별 시스템 구축 3 생활문화·체육 지도자 육성
III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분야	1 한류(산업경쟁력) 2 문화체육 전문가 3 일자리
IV 제도개선 (시스템) 분야	1 민간중심 2 낙하산 인사

I 개요

1 | 비전 및 목표

문화와 스포츠로 행복한 일상,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류문화강국

생활문화 생활체육

1 격차해소

지역별 계층별
문화체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로
문화중산층 확대

2 생애주기별 시스템 구축

전국민의 생애주기별
문화체육 참여 시스템 구축

3 생활문화·체육 지도자 육성

생활문화·체육
지도자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1 한류

글로벌 한류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과
글로벌 문화체육인재
육성을 통한 문화강국

2 문화체육전문가

분야별·경력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3 일자리

생활문화·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시장 및 일자리조성

제도개선 (시스템)

1 민간 중심

민간예술단체의
정책참여 법적·제도적
장치확보

2 낙하산 인사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을 통한
문화예술체육단체의
공정한 운영

2 |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자유한국당
생활문화·생활체육		
대상과 지역에 따라 편중된 문화체육 지원 시스템	격차 해소	지역별·계층별 문화체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문화중산층 확대
좌파문화예술 활동가 편중 지원	생애주기별 시스템 구축	전국민의 생애주기별 문화체육 참여 시스템 구축
현장 문화체육인 정치조직화에 혈안	생활문화·체육 지도자 육성	생활문화·체육 지도자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
문화산업·스포츠산업		
과도한 국가 개입·세금주도의 비효율적 지원	한류 (산업경쟁력)	글로벌한류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과 글로벌문화체육 인재 육성을 통한 문화강국
이념편향 선심성 현금살포	문화체육 전문가	분야별·경력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단기 일자리 만들기에만 집중	일자리	생활문화·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시장 및 일자리 조성
제도개선(시스템)		
국가주도 정책으로 자율적 인프라 훼손	민간중심	민간예술단체의 정책참여 법적·제도적 장치 확보
정권 코드인사 기관장	낙하산 인사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을 통한 문화체육단체 공정한 운영

Ⅱ 생활문화·생활체육 분야

1 | 격차 해소

비전

지역별 계층별 문화체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문화충산층 확대

배경

- 문재인 정부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국정과제에 담고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문화수요층 변화,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증가, 문화인프라 부족 등에 대한 해소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문화향수 실태조사' 결과(19.2.11), '16년 대비 60세 이상의 문화예술 관람률 증가폭이 두드러짐
  - 읍·면 지역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16년 대비 상승한 71.7%(6.0%p↑)이나, 여전히 대도시 관람률(82.1%)과 격차 존재
  - 가구소득별 문화예술 관람률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42.5%, 100~200만원 미만은 58.4%로 '16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월600만원 이상 가구의 관람률은 91.9%로 격차 확연
- 건전한 문화생태계 조성의 선결조건인 문화 다양성 지수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음
- 소득 격차 및 장애에 따른 문화예술·스포츠 바우처(이용권)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별 지원계층의 편차와 물가상승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지원 확대 필요

※문화이용권 : 소득과 장애에 따른 지원(연령 제한 없음)

※스포츠이용권 : 소득과 장애에 따른 유아동·청소년·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 방향 및 과제

- 문화기본법에 의한 문화센서스 운용
  - 256개 시군구 별로 문화센서스 실시
  - 기존의 인구센서스 조사와 같은 방식과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조사방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조사
  - 문화적 취향 및 문화지수 파악, 새로운 문화향유 패턴 분석 등 문화 분야 관련 통계조사 확대 재편
-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의 상호 필요한 수준을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보급으로 문화 향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해소하고, 문화적 격차 완화를 통해 문화중산층을 확대
- 문화예술스포츠 강사들을 문화소외지역에 파견하고,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작·보급하여 교육 강화
-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
- 문화예술 향유 취약층을 위한 문화예술이용권(바우처)의 지원 대상 확대
- 스포츠 향유 취약층을 위한 스포츠이용권(바우처)의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 월 8만원 → 월 10만원 인상하는 2020년도 예산 증액안 반영
  - 현재 소득과 장애에 따라 유아부터 청년까지 지원되고 있는 스포츠 바우처의 노인 대상 지원 신설
- 문화예술스포츠 자원봉사센터 설립
  - 문화예술체육인들의 자원봉사 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격차 해소

2 | 생애주기별 시스템 구축

비전 전국민 생애주기별 문화체육 참여 시스템 구축

배경

- 문재인 정부는 생애주기별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나, 일부 세대에 지원 편중
- 특히, 스포츠의 경우, 기존 성인 위주의 생활체육프로그램, 스포츠클럽 등에 지원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지원시스템 미흡
-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수영 강습은 국가적으로 최우선 지원 분야로의 지정이 필요하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재난과 위급 상황에 취약층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교육에서의 수영 교육 또한 지역과 소득 격차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영교육을 위한 수영교습 장소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임

정책 방향 및 과제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자료·콘텐츠 제작 및 보급
- 지자체의 생활문화,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연계
  - 문화스포츠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등과 수요자 연계를 위한 플랫폼 운영
- 재난과 긴급상황의 취약층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 지원 확대,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 건립 확대
  - 생존수영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2020년도 예산 증액안 반영

3 | 생활문화·체육 지도자 육성

비전 생활문화·체육 지도자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

배경

생활문화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생활문화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재정률이 낮으며, 지역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사업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대부분임
- 또한, 생활문화는 예술뿐만 아니라 생활양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나, 대부분의 지자체 생활문화 관련 정책 및 사업은 예술 지원에 편중되어 있음

생활체육

- 2018년 생활체육 참여율은 62.2%(2018년 국민생활참여 실태조사)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향상 등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실제로 생활체육 참여에 한계가 있는 임산부, 영·유아, 여학생, 노인 등의 참여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부재로 스포츠복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대상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추진으로 실효성 미미
- 생활체육은 단순한 스포츠참여에서 벗어나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등 스포츠복지 개념으로 접근하여,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삶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필요

정책 방향 및 과제

- 생활문화 공유 플랫폼 구축
- 지역문화인(전문 예술체육인 및 아마추어 예술체육인 통합) DB 구축
- 아마추어 예술인 및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국민 대상으로 상담 및 정보제공, 용품 임대, 체력 진단 등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 직장, 학교, 지역의 동아리와 동호회 등을 시민문화클럽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문예회관 등을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형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 건강증진을 위한 매개체로 스포츠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스포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
  -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사회문제를 스포츠참여 등 스포츠복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스포츠기본법」 제정 및 체육관련 법률 개정
- 대상별·지역별 특성 등 수요자를 고려한 맞춤형 스포츠복지 실현
  - 참여에 한계가 있는 소외계층(임산부, 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단순한 스포츠참여가 아닌 스포츠복지 차원의 정책적 지원 필요
- 문체부 중심의 생활체육진흥보다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 등 스포츠복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문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안부 등 범부처적인 지원체계로 대국민 스포츠복지 실현 필요
  - 현재 의료비의 95% 사후 지원, 사전 예방은 단 5% 불과. 스포츠복지를 통해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의료적 예방효과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추진

    ⋯→ 대국민 스포츠복지 시스템 구축

III 문화산업·스포츠산업 분야

1 | 한류(산업경쟁력)

비전

글로벌한류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과
글로벌 문화체육 인재 육성을 통한 문화강국

배경

- 대중문화콘텐츠 민간산업 분야의 선도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BTS를 중심으로 한 K-POP의 세계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정부의 지나친 국가적 개입보다는 시대적 흐름과 콘텐츠 환경 변화에 따른 대중문화 콘텐츠 민간 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 동력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함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세세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국가 개입과 예산 지원을 함으로써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정책 방향 및 과제

- 대중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 발전 동력을 위한 기반 조성
  - 시대적 흐름과 콘텐츠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 「(가칭)지속적인 한류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한류 확산에 기여한 문화예술체육인, 콘텐츠, 기업 등에 세제 혜택 기준 마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 연장 및 공제 혜택 대상 확대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국 법인 사업자의 제작비용 세액 공제 확대

| 국내·외 무대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재에 대한 국가지원금제도 확대

- 문화콘텐츠 기술 및 인재 발굴과 지원 강화

2 | 문화체육 전문가

비전 분야별·경력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배경

| 정부의 문화정책은 부처 내 이기주의에 따라 실국별로 벽이 높고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융합정책이 전무한 실정임

| 예술위원회 및 콘텐츠진흥원은 정부 지원금으로 예술가와 콘텐츠기업에 투자하고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특정 분야에 지원이 중복되어 예산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 예술가들과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생활이 열악하나 근원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정책 방향 및 과제

| 예술인 경력제도 및 예술인복지재단 확대 개편

| 문화예술 및 체육 강사 현황 정기적 실시

| 문화예술교육사제도 전면 재검토 및 급제 조정, 이수요건 강화로 양질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문화콘텐츠뱅크 설립

- 순수예술과 문화산업 연계를 위해, 창작자의 작품과 기술개발자의 특허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레고 방식의 창작시스템 지원제도 마련

각종 콘텐츠 및 예술작품 등 문화아카이빙 센터 설립

- 예술창작품, 미디어콘텐츠 아이디어와 저작권, 예술교육 모듈, 콘텐츠 기술 등 창조품의 감정 평가 및 판매, 유통, 아카이브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유통 센터 플랫폼 운영
- 문화예술종사자들의 창작물에 대한 DB 구축으로 체계적인 전문 인력 육성과 창작물 관리

3 | 일자리

비전 생활문화·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시장 및 일자리 조성

배경

문재인 정부는 2년간 77조라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취업자 수 증가와 실업률 등 실질적인 지표는 고용침체 여전

- 특히, 체육인들의 일자리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불안 여전
- 또한, 체육계 일자리 자체가 매우 제한적으로 체육전공자 등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한정

※ 체육교사, 대학교수, 체육단체 및 프로스포츠구단 등을 제외하면 고용보장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한정

- 따라서, 체육계 일자리 창출은 신규 사업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추진되어야 하나, 대부분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한

- 체육계 일자리는 비정규직 단기 근로자가 대부분이며, 우수한 은퇴선수나 대학을 졸업한 체육전공자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단시간 근로자나 비정규직으로 고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운동선수는 신체적인 능력에 따라 보통 30세 전후로 은퇴하게 되고, 전문대 이상 체육전공자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취업이 늦어져 경제의 핵심세대인 3040세대의 체육인 일자리 부재

정책 방향 및 과제

- 문화예술미디어콘텐츠 창작을 지원하는 융합창작인프라센터 설립
- 문화스포츠 창업지원센터에서는 기술개발, 자금융자, 교육 및 컨설팅 등 분야 세분화하여 지원
- 4차산업 혁명 대비 인문학, 사회학, 미래학 등 유관분야 전문가들을 멘토로 영입, 2030 중심의 문화정책 연구단 결성으로 신규 문화일자리 창출 연구
- 국가공인경력인증제도 실시로 자신의 창작활동을 증명
- 문체부 중심 추진 사업의 제한적인 일자리에서 벗어나, 체육인의 특성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 생활SOC 사업을 통한 신규체육시설 확충 또는 개발제한구역(GR) 내 체육시설 설치 추진 등 민간 위탁관리를 농한 일자리 창출
  - 기업과 연계한 기업소속 운동선수 고용을 통해 대회나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와 사내 직원의 스포츠활동 강습 병행

- 체육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방안(예시)
  - 영·유아 신체활동 운영 전담 지도자 배치(영·유아스포츠시설 신설)
  - 학교 내 건강운동관리사 배치를 통한 학생의 건강체력 관리(교원지위 부여)
  - 방과 후 스포츠돌봄 지도자 인력 확대 배치
  - 재활훈련·재활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건강운동관리사 영역 확대
  - 요양원, 요양병원 등 노인의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인력 확대(사회복지사 연계)

Ⅳ 제도개선(시스템) 분야

1 | 민간중심

비전 민간예술단체의 정책 참여 법적·제도적 장치 확보

배경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예산은 실국별로 유사비율로 순증하여 왔으나, 미래 문화정책 개발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예산 분배가 시급함
- 정부의 예술창작 지원금 정책이 연단위로 집행, 先 지원 後 창작제로 운용되면서 지원금이 소비적인 이념 편향적 배분 예산이 되도록 국가 기관이 방치하고 있음

정책 방향 및 과제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편향적·비효율적 지원 시스템을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
- 주요 정책 및 예산을 각급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하는 정책 거버넌스 시스템 마련. 화이트리스트 및 블랙리스트 원천 차단을 위해 지원금 독과점 시비를 없애는 한편, 순수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역할 강조 및 자생력 확보
  - 문화예술위원회 구성에 예술기관단체 추천 및 참여 제도화
- 자생적 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창작 지원제도 마련 시급. 중장기적으로 현행의 先 지원제도에서 창작 완료 후 지원제도로 개선

2 | 낙하산 인사

비전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을 통한 문화예술체육 단체의 공정한 운영

배경

-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의 1번 과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거론하였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여전히 코드인사 논란 등으로 현장의 불만이 많음
  - 문체부 산하 9개 문화예술기관 임원의 79명 중 40명(50.6%)이 코드인사 (2018년 김재원 의원실 자료)
  - 블랙리스트 문제를 비판했던 현 정부에서 정작 자신들이 집권 후 코드인사 등으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점은 '현 정권의 내로남불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줌
- 문화예술체육분야는 각 기관마다 특성과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자율성 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정책 방향 및 과제

- 문화예술체육분야의 효율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장의 경우 관련 전문가 발탁

  ※ 해외의 경우도, 관련 전문가를 임명하고, 임기보장과 함께 역량이 확인되면 연임을 통해 10년 이상 임기를 보장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이사회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만 개입

- 특히 문화예술체육분야의 경우, 각 기관마다 특성과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정치권 영향을 배제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임용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이를 통하여, 문화예술체육분야의 산하 기관의 역량강화와 함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기반과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등으로 인하여 피해 받고 있는 문화예술체육인 구제 방안 마련

주거 정책비전

살기좋은 내집, 쾌적한 우리 동네, 세금 부담 경감

I 개요
1 비전 및 목표
2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II 이슈별 정책비전
1 분양가 상한제 관련
2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관련
3 신도시 정책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관련
4 장기소유주택 재산세 및 어르신 주택 재산세 부담 경감
5 보유세 관련
6 생애최초 주택구입 마련
7 재개발, 재건축 관련

I 개요

1 | 비전 및 목표

살기좋은 내 집, 쾌적한 우리 동네, 세금 부담 경감

1	분양가 상한제 관련	문재인 정권의 독단적·반시장적 규제를 막겠습니다
2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관련	결과적으로 세입자 부담만 가중하는 정책을 막고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수용 가능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운용
3	신도시 정책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관련	신도시 주민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삶의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4	장기소유주택 재산세 및 어르신 주택 재산세 부담 경감	국민 여러분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5	보유세 관련	정부가 마음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6	생애최초 주택구입 관련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더 쉽게,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구입은 더 빠르게
7	재개발 재건축 관련	시장친화적 재개발·재건축 정책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2 | 이슈별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자유한국당
독단적 반시장적 규제	분양가 상한제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반시장적 규제를 막겠습니다
세입자 부담만 가중하는 반시장 아마추어 부동산정책	전월세 정책	결과적으로 세입자 부담만 가중하는 정책을 막고 세입자와 임대인이 모두 수용 가능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운용
베드타운만 양성하는 3기 신도시 건설	신도시 건설	신도시 주민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삶의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재산세 부담	재산세	국민 여러분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꼼수증세 공시가격 폭등	보유세	정부가 마음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빼앗긴 내 집 마련의 꿈	생애최초 주택구입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더 쉽게,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구입은 더 빠르게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막겠다는 정부	재개발·재건축	시장친화적 재개발·재건축 정책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II 이슈별 정책비전

1 | 분양가 상한제 관련

비전 문재인 정권의 독단적· 반시장적 규제를 막겠습니다.

배경

- 문재인 정권이 마음대로 강행하겠다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실패했던 제도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건설사의 부담을 높여 주택공급 물량 급감 현상을 야기시켜 오히려 부동산 가격 급등 초래
-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재개발·재건축은 더 어려워져 건설사들은 공급을 줄이고, 주택 품질은 저하될 가능성이 높음
  - 일명 로또 아파트가 늘어나 청약 과열이 나타날 것이며, 결국 새 아파트 품귀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
- 실제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19.11.6) 후 서울지역 집값은 20주 연속 상승세이며, 상한제 대상지에서 제외된 과천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한 주 만에 0.97% 폭등하면서 상한제 풍선효과가 나타남
  - 전문가들은 상한제 집중 타깃인 강남 3구 집값을 잡기는커녕 주변 지역 집값만 올려놓고 있다고 지적
- 국토부는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입장이 달라, 편의에 따른 잣대 적용 문제
  -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서 정한 일반분양가는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기대수익이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서는 실현이익이라며 과세

정책 방향 및 과제

- 정책 거수기로 전락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악용해 정부 자의대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주거기본법 (개)」 중점 추진
  - 주거정책심의위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위원자격 기준 강화)으로 구성
  - 서면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
  - 심의결과 공개
-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조정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지정요건이 해소된 경우 규제지구지정을 해제하도록 기준 마련

2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관련

비전

결과적으로 세입자 부담만 가중하는 정책을 막고
세입자와 임대인이 모두 수용 가능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운용

배경

- 서민 주거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월세 제도를 조국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발표하는 현 정부의 反시장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이 도를 넘고 있음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논의 도중 정작 서민에 대한 부담만 가중될 것이 우려되어 철회된 낡은 정책
- 인위적인 가격통제와 자율계약 규제는 주택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제도 시행 전 전월세 가격만 폭등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
  - 실제로 지난 90년도에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할 당시 서울지역 전세가격이 89년 23.68%, 90년 16.17%씩 폭등한 전례있음
- 임대인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며 중장기적으로 전세매물이 감소할 우려

정책 방향 및 과제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지원
  - 일정소득 이하 세입자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유도 : 전세 대출 이자 경감
  -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유도 : 보험수수료 일정 부분 감면
- 전월세 시장의 수요와 공급,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피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3 | 신도시 정책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관련

비전

신도시 주민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삶의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배경

- 3기 신도시 건설은 자족기능과 교통망 없이 '육지 속의 섬'으로 전락한 1·2기 신도시를 희생시켜 베드타운만 양산할 뿐,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음
- 수도권 직장인의 하루 평균 출퇴근시간은 133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5배에 달함

정책 방향 및 과제

-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전면 재검토
- 기존 신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에 우선
  -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 기존 신도시 광역교통망 획기적 확충

※ 국토부는 ▲기존 GTX A·B·C노선에 더해 D노선 추가, ▲지하철 3·9호선 연장,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등 온갖 교통망 확충 대책을 담은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음(19.10.31). 그러나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착수하지 못했거나, 예타 사업을 통과한 지 4년 만에 착공식을 하는 등 사업 현실성과 경제성이 높지 않음. 또한, 향후 10년간 수도권에서만 최소 1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며, 연간으로 따지면 국토부의 한해 SOC 예산에 육박하는데도 사업별 구체적인 예산조차 공개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이 낮음. 반면, 자유한국당은 실효성 있게 기존 신도시의 광역 교통망 확충에 집중하고자 함

4 | 장기소유주택 재산세 및 어르신 주택 재산세 부담 경감

비전

국민여러분의 과도한 제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배경

- 최악의 경기 침체로 7년 만에 세수입이 감소할 위기에도, 정부는 514조 원의 슈퍼예산을 편성
- 문재인 정권은 세수 확보를 위해 집 가진 국민을 현금인출기인 양 활용
  - 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한 15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보유세가 전년보다 9,000억원 증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가파른 증가세임(출처 : 국회예산처 '추계&세제 이슈'(19.9.8))

정책 방향 및 과제

- 자기 집에서 오래 거주할 경우, 조세정책이 바뀌어도 재산세 부담이 한 번에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나타나도록 대책 마련
- 1주택자에 한해 5년에서 10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10~30%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법 (개)」 중점 추진
-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재산세 납부 자체가 생계에 위협이 되는 만큼 매매, 양도, 증여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 중점 추진

5 | 보유세 관련

비전

정부가 마음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제도를 깜깜이로 운용하면서 조세형평, 과세정의라며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결과, 보유세 급등으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음

정책 방향 및 과제

-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고, 국민 합의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해, 국민 부담을 줄여가도록 「부동산가격공시법 (개)」 중점 추진
- 재산세는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우선 사용되도록 대책 마련

6 | 생애최초 주택구입 관련

비전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더 쉽게,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구입은 더 빠르게

배경

-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더니, 문 정권 인사들 다수가 다주택자였고, 법을 악용해 가며 투기를 일삼았음
- 집값은 쳐다볼 수 없는 가격이 됐고, 대출 규제에 LTV까지 강화돼 정작 국민은 내 집 마련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임

정책 방향 및 과제

-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 중점 추진
- 주택 구입 시 또 다른 취득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 중점 추진
- 청년 및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대출규제 기준 완화 검토

7 |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전

시장친화적 재개발·재건축 정책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 문재인 정부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낡은 집이 무너질까 걱정하며 정부 지원 없이 스스로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국민을 국가가 막는 것임

정책 방향 및 과제

-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서울에 공급을 늘려 서울 집값 안정 도모
- 무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금융 및 세제 지원은 확대
-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자기 집을 빼앗기고 내몰리는 사람들이 사라지도록 추가부담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 도입
- 많은 분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도시 재생으로 삶의 질 업그레이드

베네수엘라REPORT
위원회 활동보고

경제가 망해도 정권이 지속되는 사례 연구

Ⅰ 연구배경
Ⅱ 차베스 정권의 정치적 전략
Ⅲ 사법부 장악
Ⅳ 입법부 장악 및 선거제도 악용
Ⅴ 재원 대책 없는 과도한 복지로 인한 경제파탄
Ⅵ 반시장 정책으로 시장 신뢰 상실과 국가 경제 파탄
Ⅶ 지방권력 장악 및 조직화
Ⅷ 언론장악
Ⅸ 대중 선동을 통한 국민의식 장악
Ⅹ 문재인 정권 상황과 시사점

Ⅰ 연구 배경

과거

◎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부국이자 정치적으로도 가장 안정된 국가였음

-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한때 남미에서 일인당 국민소득 1위의 최고 부국
-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남미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이고 양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 체제 유지

현재

◎ 심각한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

- 2014년 이래 매년 성장률 마이너스 기록, 2018년까지 실질 GDP 49% 감소
- 외환보유고 감소
  2009년 350억불 → 2018년 현재 88억 달러
  1000억 달러가 넘는 외채로 사실상 디폴트 상태
- 인플레이션 증가
  2015년 180% 기록한 이후 지속 증가 → 2019년 1분기, 전년도 동기 대비 33만%
- 빈곤층 증가 : 2014년 48.4% → 2017년 87%
  극빈층 증가 : 2014년 23.6% → 2017년 61.2%
- 2018년 10만 명 당 살인률 53.7명으로 온두라스에 이어 세계 2위, 생필품과 의약품 부족, 인구의 10%가 넘는 약 4백만 명이 살길을 찾아 해외로 이주

◎ 베네수엘라는 경제적 실패를 넘어 국가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베스주의 체제(차베스, 마두로)가 유지(1999~ 현재)되고 있음

◎ 차베스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권을 공고화 하는 과정에서 각종 제도와 선거,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었으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권력이 유지되고 있음

◎ 또한, 민주주의 수호의 한 축이며 동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법부와 선관위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변질되어버림

따.라.서. 베네수엘라REPORT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상황과 베네수엘라 실태를 비교 분석함

- 베네수엘라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등은 상이함 하지만, 차베스 집권 이후 베네수엘라에서 좌파정권 유지를 위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진 숱한 사건들과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 사이에 유사한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음. 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문재인 좌파정권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작업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음

-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나도 정권이 유지되는 기이한 지구상의 두 국가가 북한과 베네수엘라임. 문재인 정권의 권력 운용을 살펴보면 이들 두 국가의 권력 유지 방식에 대해 상당한 스터디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의 좌파장기독재를 막기 위해 베네수엘라식 권력 유지 수단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 이번 연구를 통해, 숱한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고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일궈낸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의해 국가의 정체성부터 흔들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질서가 훼손 되면서 사회주의 얼굴을 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태를 온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고 이를 극복하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고대함

II 차베스 정권의 정치적 전략

◎ 차베스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 소수 세력의 권리 보장보다 다수의 지배와 다수만을 위한 정치에 더 많은 가치를 둠

- 차베스는 기존의 대의민주제에 환멸을 느낀 다수의 빈곤층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보다 급진적 사회변혁을 추구함
- 빈곤층 다수를 결집하기 위해 부유층을 적으로 공격

: 차베스는 모든 사회세력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정치세력 간의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보다 반대파를 악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편을 규합하고 그를 바탕으로 선거를 통한 다수의 절대 권력을 강화함

◎ 의회를 통한 대의민주제보다 국민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선호

: 기존 제도의 무시

◎ 경제위기 이후 정치적 다수의 기반이 사라진 마두로 정부는 사법부 지배를 통해 합법적 탈을 쓴 정치적 전횡을 행함

- 50% 이상을 유지하던 차베스주의 지지율은 2015년 이후 30% 이하로 하락했고, 2018년 24% 기록, 현재 20% 이하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됨
- 차베스 시절 한때 중남미에서 가장 높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도 2014년 이후 급격히 하락해 현재는 12% 기록

◎ 인종 코드에 기반을 둔 정치적 적대전략

- 차베스 반대파들은 빈곤층 차베스주의 지지자들(대부분 원주민, 흑인, 혼혈인 등 유색인종)을 동물 냄새가 나는 '원숭이'로 희화화하거나 품격 없는 '야만인'으로 비하함
- 차베스주의는 기존 지배세력을 인종차별적·계급주의적 권력 집단으로 규정하는 적대전략 취함
- 차베스주의는 대중의 흑인과 원주민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반차베스 주의자들을 '백인-외국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혐오증을 확대시킴
- 차베스 본인은 자신의 종족적 정체성을 흑인과 원주민 사이의 혼혈인인 삼보로 규정하면서 자신과 빈민층 대중과의 종족적 동질성 강화
- 그런 과정을 통해 대중은 차베스를 자신과 동질화하고 차베스 정부를 자신의 정부로 받아들이게 됨

III 사법부 장악

개요

차베스 사후 최악의 경제 상황임에도 현 마두로 정부가 유지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법부를 장악해 정권유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

베네수엘라의 실태

1 | 사법부 장악

◎ 정권 친화적 여건 조성

일 시	주요 내용	참고 사항
1998년 12월	• 차베스 대통령 당선	
1999년 2월	• 상하원,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차베스 대통령 취임	
1999년 8월	• 차베스 대통령, 사법부에 대한 긴급비상사태 선포 - 최고사법재판소(대법원) 배제하고 '사법비상위원회' (Judicial Emergency Committee) 설치	
1999년 12월	• 국민투표로 신헌법 제정 - 대통령 재선 허용, 경제에서 국가 역할 강화 등	
2004년	• 최고사법재판소 판사 수 증원(20명→32명) - 대부분 차베스주의자로 채움 (차베스주의자와 비차베스주의자의 비율은 7대 1 정도)	

◎ 하급법원에 대한 통제 강화

- 최고재판소 6명의 판사로 구성된 '사법위원회'에서 하급법원의 임시 기간제 판사 수 백명을 지명하고 해고할 뿐만 아니라, 사법위원회 재량으로 임시 기간제 판사를 승진시키는 방식으로 종신직 부여

2 | 사법부 정치화 주요사례

◎ 취임 후 4,700여명의 판사와 직원들 중 절반가량을 부패 혐의 등으로 조사

◎ 대법원, 권력 견제보다 정권의 정치적 어젠다를 지지하는 역할에 더 충실

- 2007년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합헌 인정, 민영방송 RCTV 폐지 합헌 인정, 노조 선출에 정부 개입 합헌 인정
-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반정부적 청원의 대부분을 정부에 유리하게 판결(293개 판결 중 80%대가 청원자에게 불리한 판정)

◎ 2009년 12월 하급법원의 임시 기간제 판사 아피우니(María Lourdes Afiuni)가 부패혐의로 구속 중인 인물(은행가 앨리히오 세데뇨)을 UN 인권위 권고에 따라 조건부로 석방하자 아피우니를 즉시 체포 구속. 이는 사법부에 신분 불안 수준을 넘어 구속될 수도 있다는 공포 효과를 끼침

- 최고사법재판소장 모랄레스(Estella Morales) "우리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결코 당신(차베스)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발언 등 판사들이 공식적으로 차베스 지지 선언

IV 입법부 장악 및 선거제도 악용

개요

1998년 대선보다 한 달 전에 실시된 총선(1998년 11월)에서 야당이 의회를 장악하여 여소야대의 정국이 되자 차베스 정권은 다수의 힘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제헌의회를 소집(1999년)하여 기존 의회를 해산하고 입법권을 완전 장악함으로써 장기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합법의 형식을 갖추면서 초법적으로 국정 운영

베네수엘라의 실태

1 | 입법부 장악

◎ 차베스 정권은 권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선거(국민투표 등)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헌법 개정 등)를 활용

일 시		주요 내용
차베스 정권	1999년 출범	• 여소야대 상황 극복 수단으로 국민투표 실시 - 제헌의회(131명 중 차베스를 지지하는 애국동맹 125명 당선) 구성, 입법부 장악
	1999년 12월	• 국민투표(71.8%)를 통해 신헌법 제정 - 대통령 임기 : 5년 → 6년 중임 - 입법부 : 양원제 → 단원제, 임기 5년
	2000년 7월	• 재실시한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 (165석 중 92석 차지)
	2005년	• 야당의 선거 불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집권세력 총선 압승

일 시		주요 내용
마두로 정권	2013년 출범	• 대법원, 제헌의회, 선관위 통해 국정 장악
	2015년	•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되자(야당 연합이 국회의석 2/3 차지) 대법원 통해 대통령에게 법령통치권 부여로 의회 무력화 시도 • 대법원은 의회 통과 법안 폐기 조치, 예산 가결 권한 등 대법원 권한 강화
	2017년 5월	• 대법원의 권한 결정에 따라 대통령 명령으로 제헌의회 소집 발표→ 대법원은 이를 합법화 해줌
	2017년 7월	• 야당이 불참하는 제헌의회 선거 강행
	2017년 8월	• 제헌의회 공식 출범

2 |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선거제도 개악

◎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 1999년 헌법 개정으로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선관위원 5명 중 4명을 친여당 성향으로 임명하고 퇴임한 선관위원장들을 공직에 재임명하는 등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 2015년 총선에서 야당 압승, 야당의 마두로 국민소환 추진에 대해 선관위는 2016년에 국민소환투표 추진 건 정지 결정 발표
- 선거관리위원회도 2018년 대통령선거 조기 실시를 결정해서 마두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지원

◎ 선거제도 활용

- 2005년 총선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정된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가 감해지는 연동형 비례제를 우회하기 위하여 기존의 집권 여당은 비례후보에 출마하고 연합세력 UVE를 창당하여 지역구에 출마시킴

-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주요 5개 야당이 총선에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집권 여당과 연합 세력은 167석 중 161석을 석권
- 정당 연합을 통해 연동형 비례제의 순수한 취지가 훼손될 수 있고, 야당도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2005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2009년 병립형 비례제로 선거제도를 변경해서 2010년 실시

◎ 선거일정 일방적 조정

- 2016년 12월 예정이었던 지방선거 연기
- 2017년 헌법이 요구하는 국민투표 없이 제헌의회 소집
- 2017년 7월 제헌의회 선거에 야당은 불참, 최소한 백만 표 정도의 참여율 조작(공식적 투표율 41.53%이지만 야당은 20% 이하라고 주장)이 있었다며 선거 부정 의심
- 제헌의회, 지방선거를 10월 5일에 서둘러 실시하여 여당이 23개 주 중 17개 주에서 승리함. 야당은 야당 지지자 투표 방해, 불법 전입 전출 등 전례 없는 선거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거 결과 불인정
- 12월 10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시 단위 선거 개최
- 2018년 2월 선관위, 그해 12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야당과의 협상 없이 4월 22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가 3월 초에 다시 5월 20일로 재발표하고 실시

V 재원 대책 없는 과도한 복지로 인한 경제 파탄

개요

차베스 시절 고유가로 재정수입이 넉넉해지자 이를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고, 저유가가 도래하여 재정수입이 급속하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복지지출을 지속함에 따라 국가의 조세 재정시스템이 붕괴됨

베네수엘라의 실태

1 | 고유가로 인한 수익을 복지지출 확대로 사용

◎ 차베스 대통령은 1999년 대통령 취임 후 2013년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석유로 벌어들인 재원(2000년대 고유가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8,000억달러로 추정)의 상당 부분을 빈민층에게 무상 교육·의료와 저가 주택 등을 제공하는 데 사용

◎ 정부의 세입 대비 사회지출은 1986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평균 36.2%이었는데, 1999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에는 연평균 60.7%로 24.5%나 상승. 동 기간의 사회지출 절대 금액 합계도 미화 약 735억 달러에서 약 4,686억 달러로 6.37배나 증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2000년 28%에서 2017년 41%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됨

- 복지정책 강화는 차베스 대통령이 취한 대중 영합적 좌파 노선을 뜻하는 '차비스모'(Chavismo)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마두로 대통령까지 이어짐

2 | 무분별한 퍼주기식 복지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듯 했으나, 결국 재정파탄과 함께 효과가 거의 소멸

◎ 정부의 복지지출이 대폭 확대되면서 2003년에는 빈곤율과 극빈곤율이 각각 54.55%, 25.05%에 달했으나, 2011년에는 27.05%, 7.15%로 대폭 축소되었음.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1998년 0.4865에서 2011년에는 0.3902로 떨어져 사상 최초로 0.4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는 UNDP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수치임

◎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빈곤율과 극빈곤율은 2012년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여 CEPAL 자료가 마지막으로 가용한 2014년에는 각각 28.3%와 12.0%로 대폭 상승하였음. 빈곤층은 2014년 48.4%에서 2017년 87%로 증가하고, 극빈층은 23.6%에서 61.2%로 증가하였다는 통계도 있음

3 | 재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복지의 급속한 확대는 오늘날 베네수엘라 경제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

◎ GDP대비 정부의 세금 수입 비중은 2015년에는 최대 20.0%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국제유가가 하락했던 2017년에는 동 비중이 6.7%까지 하락하여 국가 조세원이 거의 고갈되었음

◎ 2015~2016년 저유가시기를 거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2015년 -17.6%에서 2017년 -31.8%로 적자폭이 대폭 심화되었으며, 2018년도에도 -3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 복지지출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GDP 대비 공공 부채의 비중은 2008년 15.2%였으나, 2013년에는 32.9%로 5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정부 부채 비율은 이미 2018년에 175.6%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VI 반시장 정책으로 시장 신뢰 상실과 국가 경제 파탄

개요

21세기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반시장, 반기업 및 사유재산권 침해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자국인과 외국인의 투자위축, 이에 따른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극심한 경기침체와 극심한 초하이퍼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여 경제 시스템 붕괴됨

베네수엘라의 실태

1 | 석유의 국유화, 비효율 누적 및 투자 부족으로 생산 급감

◎ 차베스 사회주의 정권 출범 이후 석유회사, PDVSA를 국유화하여 통제권을 강화하고 친정부 인사 위주로 경영진을 구성. PDVSA에서 반정부 숙련 노동자가 대거 퇴출되고 친정부 비숙련 노동자로 대체. 전문성이 부족한 새로운 인력의 미숙한 운영으로 생산성 및 효율성 감소

- 마두로 대통령은 야권 탄압 및 권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이 전무한 국가수비대 수장을 PDVSA 사장에 임명하고 부패혐의로 수십명의 회사 간부를 체포하여 국영기업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

◎ 석유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수출의 95%, 재정수입의 60%) 하에서 석유 생산 및 판매 수입을 선심성 무상복지 정책에 낭비하여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 베네수엘라산 석유는 불순물이 많아 채산성이 낮은 중질유이지만 호황 시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원유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 베네수엘라는 1997년 일일 323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였으나, 차베스가 집권하던 마지막 연도인 2013년에는 일일 279만 배럴까지 감소하였고, 이후에는 급속하게 감소하여 2019년에는 일일 84만 배럴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2 | 각종 주요 산업의 국유화

◎ 2001년 9월에 '2001-2007년 국가 경제사회 개발계획'의 경제영역의 생산경제개발 부문에서 사회기업부문 육성을 강조하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면서 그동안 민영화되었던 많은 공공서비스 부문과 기초산업 생산부문의 재국유화를 천명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차베스 정부는 베네수엘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산업, 식품산업, 공공서비스, 금융 기관들에 대한 다수 지분을 확보하여 경영권을 행사

- 국유화된 주요 기업들에 통신회사인 CANTV, 전력회사, 철강회사 SIDOR, 은행 등이 포함됨

3 | 자의적 기업규제 강화와 사유재산권 침해

◎ 2010년 차베스 정부는 1월에 평가절하를 실시한 뒤 인플레 진정과 물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을 제정

- 이 법은 기업체가 근거 없이 또는 법을 위반하여 상품가격을 인상하면 정부가 해당 기업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허용

◎ 또한 2011년 7월에는 공정비용 및 가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회사가 가격 인상을 할 경우 이를 국가 비용 및 가격 감독청에 보고 하는 것을 의무화

- 정부가 달걀, 쌀, 커피, 우유, 설탕, 옥수수 가루, 식용유 등 42개 필수품 가격을 통제

VII 지방권력 장악 및 조직화

개요

군부와 친위집단을 활용해 지지세력을 조직화하며 홍위병인 **볼리바리안 서클**을 구축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회**(Communal Council)를 통해 막대한 예산 투여 등으로 지역 장악

베네수엘라의 실태

1 | 친위집단을 활용한 지지세력의 조직화

◎ 지방정부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는 차베스에게 가장 효율적인 집단

- 차베스는 군부를 적극 활용하여, 정치적 지지기반과 통치의 근간으로 활용
- 200만 명의 비정규 예비군을 양성하고, 친정부 민간조직 '볼리바르 연합회' 창설

◎ 개인 친위조직 '제5공화국운동'(MVR : Movimiento V(Quinta) República) 창설

- 개인의 카리스마에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정당정치를 대체하는 형국

2 | 차베스홍위병 볼리바리안 서클의 강력한 결집

◎ 2000년 신헌법을 공부하는 모임에서 자생적으로 시작한 풀뿌리 단체

◎ 2002~2003년 차베스 정책에 반대하는 반혁명(석유회사 파업, 자본철시)운동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전국 확산(220만 명의 회원 보유)

- 반혁명 세력 쿠데타 발생시 차베스 복귀를 요구하는 대중 시위에 선봉

3 | 중앙정부의 손발, 주민평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Communal Council)

◎ 주민들의 통일적인 참여조직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

- 만 15세 이상 성인 전부를 대상으로 최소 20%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 총회를 개회(도로 건설, 주거, 수도, 전기, 치안 등 위원회를 만들고 대표선정). 주민은행도 개설
- 정부는 컨설턴트를 파견하고, 요건을 갖춘 주민평의회를 등록

◎ 2006년 주민평의회 법을 제정해 법률적 조직으로 격상

- 1년 만에 중앙정부가 직접 주민평의회에 약 5조원 제공 (지자체 교부금의 30% 해당)

◎ 대략 3~400가구 당 1개인 4만개 전후의 주민평의회가 존재

- 2009년에는 주민평의회법이 개정되면서 그 규모를 확장, 여러 주민평의회가 모여 코뮤나스(Comunas)를 만들고 큰 규모의 지역 공동과제를 해결

◎ 노동자공동경영·협동조합·사회경제적 기업·소액금융과 연결, 막강한 역할 수행

VIII 언론장악

개요

차베스는 2002년의 쿠데타를 보수언론의 반동행위로 규정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언론을 장악함. '라디오와 TV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언론장악의 법적 틀을 구축하고 2007년 최고 권위 방송인 RCTV의 등록을 취소하고 국영 방송을 확대함. 최근에는 웹 사이트까지 통제에 들어감

베네수엘라의 실태

1 | 2004년 '라디오와 TV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RESORTE)' 통과

▶ 2011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포함시킴

◎ 언론의 사회 책임론을 법률에 적시하고 정부의 미디어 검열지시 조항을 둠

- 지체없이 메시지 보급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도록 언론자정 요구
- 위반시 연간소득의 10% 또는 3,000USD의 벌금 부과나 서비스 정지

◎ '정부비판은 국가에의 음모' 등 법의 모호한 정의와 표현 내용의 광범위한 규제

◎ 공영방송이나 민영방송의 무료 정부홍보(10분) 의무제

2 | 비판적 민영방송사 퇴출

◎ 2007년 독립민영방송 RCTV(라디오카라카스) 방송면허기간 갱신불허 후 폐쇄
- 쿠테타 보도 관련,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재허가 거부사유
- 운영진만 교체하고 5천여명의 직원들과 기자는 베네수엘라TV에 흡수

◎ 2009년 기술적 및 행정적 이유로 34개 라디오 방송국 폐쇄

3 | 국가(State)미디어 확장 및 공동체 미디어 육성

◎ 기존 국영TV 1개, 국영라디오 2개에서 국영TV 4개, 국영 라디오 7개로 확대

◎ 수도 카라카스의 공동체TV 3개를 포함해 700여 개의 공동체 미디어 존재
- 170개 가량이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코나텔(CONATEL)' 허가로 예산 지원
- 국영방송(비베티브) 연계, 국영방송을 통해 매일 하루 1시간씩 공동체 방송 송출

4 | 마두로 정권 이후 언론통제 강화

◎ 친정부 언론에 12배나 많은 정부광고 배정하며 언론사 길들이기 본격화

◎ 신문제작을 위한 수입 신문 용지 가격을 통제
- 시골의 작은 신문에 신문 용지 유통을 확대하고 대형신문의 발행부수를 통제

IX 대중 선동을 통한 국민의식 장악

개요

차베스 자신이 Alo Presidente(안녕, 대통령!) 프로그램과 다양한 현장활동을 통해 대국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함. 강력한 국가 담론형 메시지로 지지자들의 사상을 투철하게 무장시키고 차베스식 국민선동 감정일체화법으로 지지강도를 끌어올림

베네수엘라의 실태

1 | Alo Presidente(안녕, 대통령!)을 통한 대중 만남

◎ 차베스가 국영TV인 베네수엘라TV(VTV)를 통해 매주 일요일 오전에 시작하는 국민들과의 열린 대화 TV프로그램 (끝장토론형식)으로 최대 시청률 40% 육박

◎ 현장에서 장관을 불러내 군중의 질문에 답을 하게 하거나, 집무실, 공장, 길, 마을에서 국민들과 끊임없이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을 TV로 방영

2 | 강력한 국민선동 메시지

◎ 차베스가 국민이다(Chavez es Pueblo)란 선전으로 썩은 정치와 새로운 정치 프레임을 구사, 자신과 베네수엘라 서민을 일체화

◎ 볼리바르 혁명을 내세워 독립영웅 볼리바르를 통해 '애국심'과 기존의 사회체제를 엎기 위한 '혁명정신' 강조

◎ 반미·반제국주의(Anti America, Anti Imperialism) 기치로 '부시는 악마' 등 반미 감정 자극하고 남미통합(ALBA: Alternativa Bolivariana de las Américas) 등 거대 담론 통한 큰 지도자 이미지 구축

◎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이상으로 제1차 사회주의 경제발전계획(2007) 추진

3 | 국민 직접 참여의 인터넷 청원사이트를 운영

◎ 차베스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체제 추진

◎ 모든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명분론 설파

◎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입법부 압박, 이에 반대하는 의원은 국민 뜻을 따르지 않는 적폐세력으로 매도

X 문재인 정권 상황과 시사점

1. 사법부 장악

1 | 편향적 구성

◎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교체 후 대법원장 등 편향인사로 사법부를 코드화하여 외형은 3권분립이지만 실제는 대통령에 철저히 예속된 상태

-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는 전체 판사(3000명)의 20%에 불과함에도 연구회 출신이 사법부 주류로 급부상
- 민변 출신 변호사들까지 대법관으로 임명하며 사법부가 '기울어진 법정'으로 전락

◎ 대법원 구성 현황

- 대법관 14명 중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포함 9명 임명
- 이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내 사조직, 민변 출신임. 나머지 대법관 5명 중 4명도 추가로 대통령 임기 중 교체 예정으로 이 경우 대법관 13명이 이념 편향적 코드인사로 구성될 우려

◎ 헌재재판관 구성 현황

- 재판관 9명 중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재판관, 양승태 前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등 3명을 제외한 다른 재판관 6명은 친문인사로 인선, 역사상 최초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었던 4명도 임명 강행
- 재판관 9명 중 5명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임
-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헌법 개정에 준하는 결과나 위헌 결정을 통해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는 사실상 '입법' 기능 가능.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코드재판관들이 의도하면 개별법을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상황

※독자적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 6명

2 | 사법부의 독립성 파괴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1심 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상대로 진영 대결구도를 만들어 언론, SNS를 통해 '적폐 판사'로 여론몰이 하며 기소하고, 가족까지 신상털이 인신공격 자행

◎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판사들에게 탄핵 압박하며 사법부의 정치화와 독립성 훼손

◎ 양승태 前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이 된 법원 내 3차례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서도 형사범죄 요건 성립이 안 된다는 결론에도 검찰은 '직권남용죄'로 기소함. 이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과 고법부장 이상 중진법관들이 의혹을 해소해주도록 요청했음에도 오히려 법원 자체 조사가 미진하였다며,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임을 전제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의혹을 확대·재생산시킴

◎ 대통령이 법원의 날 행사에서 '사법농단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자,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서 검찰수사 적극 협조 의사를 공개적으로 복명하였고, 이후 전 대법원장 포함 100여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되고 사상 초유의 전 대법원장 구속 및 전·현직 법관 10여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수십 명의 법관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비위 사실 통보하며 사법부를 위협함

◎ 코드인사 김형연 법제처장,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 등은 사법부가 청와대에 예속되었음을 보여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태

- 김형연 처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의혹을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 주장. 그러나 현 정권 출범 직후 인천지법 부장판사 사표를 낸지 이틀 만에 법무비서관으로, 2년 뒤 법제처장으로 임명됨.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영식 비서관은 법원에 사표를 내고 3개월 후 청와대로 직행함

2. 장기집권 위한 선거제도

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열2위 상임위원으로 지난 2017년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던 조해주 후보자를 국회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임명하여 정치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관위의 중립성 정면 훼손

2 | 선거법 날치기

◎ 국회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여야가 타협 조정 합의로 처리해온 전통을 존중하고 지켜오고 있으며, 각종 선거를 여야 합의의 선거법으로 치러왔음. 폭력과 수의 힘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전 시대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온 것은 의회민주주의 불변의 가치이자 대의제민주주의 원리 그 자체였음

- 민주당은 이런 의회질서와 전통을 깨고, 관제야당들과 함께 정개특위에서 물리적 충돌을 야기시키면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 강행함(4.30)
-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임시국회 회기 중 사보임 할 수 없는 국회법 규정 위반 ▲해당 의원의 동의 후 사보임 해온 국회 관례까지 파괴한 불법 강제 사·보임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법질서를 농락한 사상 초유의 근거 없는 전자 입안시스템을 통한 법안 발의 횡포로 물리적 충돌 유발
- 야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제도를 발동시켰으나, 여당 소속 위원장이 국회법상 보장된 안건조정위 90일간의 숙려 기간도 무시하고 직권으로 하루만에 '연동형비례대표제안'을 조정안으로 의결시키고, 다음날 바로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인 표결 강행으로 날치기 폭거를 자행함(8.29)
- 이는 선거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선거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 입법부인 국회마저 장악해 결국 좌파독재 연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의회민주주의 말살 시나리오임
- 향후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을 위해, 개헌 가능선인 범여권 국회 의석 2/3 확보를 위해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하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음

3. 언론장악 실태

1 | 언론의 독립성·공정성 파괴

◎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편향된 좌파인사 중심으로 완전 장악됨

- YTN, 서울신문 등 준공영언론도 코드인사가 사장에 임명되고,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기여한 민노총의 언론노조는 사내 헤게모니를 쥐고 언론으로서의 사실 보도와 권력비판 등의 역할보다 진영논리 차원에서 왜곡된 여론형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

◎ 공영방송 장악에 이어 보수언론의 보도에 대한 압박, 좌파언론 키우기, 그리고 최근 정권에 비판적인 유튜브 검열 등을 모색하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

◎ 최근 검찰은 친여 시민단체가 고발한 '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 건으로 조선일보 수사에 착수함(8.21)

- 지난 7월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선일보 폐간·TV조선 취소' 국민청원 글이 등록되어 조직적으로 비판언론 탄압이 가해지고 있음

◎ 유튜브세(稅) 도입과 가짜뉴스 등 쟁점화로 통신장악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보수·적폐·친일의 논리로 여론몰이를 하며 보수언론에 대한 탄압과 길들이기를 지속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2 | 선전선동

◎ 문재인 정권은 적폐·친일청산의 프레임 하에 과거 정부를 감성적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종북·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며, 국회의 대의민주주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앞세우는 선전선동 전개

◎ 촛불과 강력한 적폐청산을 내세워 집권에 성공한 좌파는 자유우파를 상대로 전쟁

세력, 적폐세력, 토착왜구세력 등 감정몰이식 허위사실 공세로 일관하고 있음
- 평화경제론 담론하에 종북주의를 만연시키고 한·미·일 안보 위험국면을 초래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SNS 활동 및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등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로 의회 경시 확산

◎ 대통령은 쇼(Show)정치, 좌파연예인의 방송출연, 좌파정치인의 메시지 정치로 각각의 자연스런 역할 분담 하에 국민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전개

4. 지지세력 확대

◎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광역·기초지자체와 의회 권력을 완전 장악
- 공동체 지원조직 등을 신설하여 주민참여활동을 장려하며 합법적으로 예산집행
- 특히 주민자치 안착을 명분으로 자치지원관제를 도입 → 서울시는 2022년까지 424개 전 동에 실시 예정. 인천·대전 등 전국권역으로 확산

◎ 좌파시민단체(풀뿌리 운동 등) 중심으로 마을공동체운동(사업) 전개
- 공동체푸드, 급식, 환경, 여성, 인권 등 시민단체가 지자체와 연계된 사업 추진
-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치참여 및 선도 교육 실시

◎ 예산이 뒷받침된 조직화를 통해 향후 총선 및 대선 등에 언제든 막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수 있음

5. 시사점

▶ 1999년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이후 현재 마두로까지 이 집권 세력은 초법적 수단 등을 통해 의회와 사법부를 무력화하여 20년 이상 좌파 장기집권을 해오고 있음

-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법과 제도를 통치와 정권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지방과 풀뿌리 조직도 정권유지를 위한 전위대로 삼음
-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언론도 차베스 정권의 홍보와 유지를 위한 역할에 그치며 그 본연의 위치를 망각함
- 반시장 반기업 정책, 퍼주기식 사회주의 이념 정책 등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며 경제는 회복불능 상태에 빠져 있고, 사회 혼란도 그치질 않고 있는데, 마두로 정권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어서 2015년 이후 이어져온 국민의 엑소더스는 전체 인구의 20%까지 이르고 있음

▶ 코드인사를 통한 사법부 장악,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의회 장악기도, 각종 포퓰리즘 등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이 하나같이 좌파 장기집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된 베네수엘라의 정책들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정도이고, 자칫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 사태를 답습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되어 오고 있음

- 결국, 대통령은 바뀌어도 차베스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좌파정권은 유지되고, 국가와 국민은 최악의 상태로 빠져버린 베네수엘라 위기 상태를 경계해야 함
- 이에 베네수엘라 위기의 실상을 국민께 사실대로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문재인 신독재 정권에 의해 무너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려내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좌파 정권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이번 베네수엘라 연구의 교훈임

▶ 특히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기도를 막지 못한다면 베네수엘라의 길을 가게 된다는 인식을 확인해야 함

-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임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8정책비전 + 1베네수엘라REPORT

외교안보, 교육, 청년, 여성사회, 환경, 안전, 문화예술체육, 주거

발 행 일 | 2019. 12
발 행 처 |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편집/인쇄 | (주)자루애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02-6288-0200
http://www.libertykoreaparty.kr

당원용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